



박원석·한용진·김광일이  
촛불 평가와 전망을  
말한다

▶ 10~12면

대우버스·OB맥주 점거 파업 ...  
노동자 투쟁  
현황과 과제

▶ 3, 6~7, 17면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

▶ 14, 20면

북한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와  
좌파의 대응

▶ 5면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 vs 맑스,  
누가 해결책인가?

▶ 13면

발행인\_김민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주)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경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메이데이 특별 증면호

Left21.com

2009년 4월 25일 ~ 5월 8일 | 제4호 | 값 1,000원

# 리포트21

대량해고·실업·노동조건 악화·비정규직 확대

# 노동자 파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사진 이미진

쌍용차 사측은 전체 노동자의 36퍼센트에 달하는 2천6백46명에 대한 해고를 추진하며 “인력감축은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를 헐값에 인수해 ‘먹고 뵈’ 상하이 차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임금 삭감과 체벌, 사내복지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87퍼센트가 빚더미에 앉아 있고 신용불량자가 2천 명이 넘는다.

쌍용차 현장조직 노동자해방투쟁실천단 지선열 의장은 “아들을 휴학시키고 군대 보내는 동료도 많고, 학원과 유치원 끊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다. 막말로 둘 중 하나가 잘리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한 조합원은 “나는 아직 30대지만 자녀들이 대학 다니는 50대 형님이 실업수

당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며 “도대체 둘 중 하나를 자르고 회사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철판을 만지다 손이 베이고, 용접하는 불뿔에 온 몸을 대면서 저임금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대량해고당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1천7백 명이었던 비정규직이 지금은 3백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말 비정규직 3백여 명을 해고한 쌍용차는 최근 추가로 35명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냈다.

정부와 사측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용 불안에 내몰린 전체 노동자들의 초점으로 떠오를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총파업엔 3자 매각도 불투명”, “파업은 청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연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하청업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해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쌍용차를 청산한다는 것은 경제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쌍용차의 파산은 연관업체의 줄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번지며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가치대로 청산할 경우 채권단도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 3면으로 이어짐

〈PD수첩〉 압수수색, ‘고대녀’에게 4차 소환장 발부 등 MB의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 제2촛불의 불씨 짓밟기를 막아내야 한다

촛불 항쟁 1주년을 앞두고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을 4일 앞둔 〈PD수첩〉 김보슬 PD를 연행한 데 이어 4월 22일 또다시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MBC 노조 이근형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MBC 구성원들의 기를 꺾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상습시위꾼’을 색출하겠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70~8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 대상자의 일부는 수배 위협에 처해 있다. 특히 소환 대상자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고려대 총

학생회장, ‘고대녀’ 등 조직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대녀’ 김지윤 씨에게는 벌써 4차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는 촛불의 상징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다. 촛불 운동에서 ‘고대녀’ 김지윤 씨는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이명박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촛불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고대녀’가 ‘순수 촛불’이 아닌 ‘정치꾼’이라며 흠집을 내려 했고 최근 이명박의 모교 고려대 당국은 ‘고대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김지윤 씨는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명박이야말로 국민에 의해서 소환돼야 한다”고 했다.

### 저항의 예봉을 꺾으려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 탄압은 새로운 저항의 기운이 싹트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높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대졸조임 삭감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학생운동이 저항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학생 단체들은 대졸조임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등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백여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5월

1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삭발하던 학생 49명을 연행하고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살포’하면서 저항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고춧가루 분사기와 조명, 채증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시위 진압차도 개발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기관이 필요할 때 마다 대로 통화를 엿듣고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런 전방위적 탄압에도 저항

의 불씨를 모조리 끄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촛불제판 외압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다. 4월 22일 MBC 노동자들은 또다시 〈PD수첩〉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4월 19일 ‘상습시위꾼’ 소환자들은 총회를 열어 경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PD수첩〉 압수수색을 끝까지 저지하고, 5월 1일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저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탄압 국면을 돌파하고 노동자·학생·촛불 시민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종합

세상을 이끄는

“이번 돈 거래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친인척들의 가난하고 불우했던 과거가 선명하게 보인다... 내내 부자였던 현 대통령에게서 그나마 안도감을 느낀다”

－ 이명박은 부자여서 깨끗하다는  
〈머니투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벌써부터 저의 가슴이 설레입니다”

－ ‘삼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명박

“봄 개편 퇴출 0순위 [이명박] 주례연설은 예식장에서”

－ KBS 라디오 PD들의 구조

“강남 출입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다. 나는 눈처럼 깨끗한 사람”

－ ‘몸살통에서 종업원 됐다는 루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10년 전에 갔던 얘기

“[언론사 성매매 방지 교육 주장한 김상희 의원은]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 〈조선일보〉, 도둑이 제발 저러나?

“새를 잡아먹고 새가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는 악어와 이명박이 다를 게 없다”

－ 장애인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명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외상은 많이 좋아졌지만 잠을 잘 못 잔다. 요즘은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든다”

－ 두 달째 엽살 부리는 전여욱

“일본에서는 단속반원들이 헬멧을 쓰고 곤봉을 휘두[른다]”

－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비판에 대해 대전출입국관리소 심사과장 송효근

“멤버들이 엔딩 부분에서 도로의 노란 선을 밟고 걷는 장면이 교통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

－ 윤도현밴드 뮤직비디오의 KBS 방송 불가 판정 이유

“학생들의 화염병 시위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집이 불에 타서 죽을까 봐 부득이하게 구속하게 됐다”

－ 전 대통령 김영삼

무기정화 철회 투쟁중인 ‘고대녀’ 김지윤 기고

“고려대의 무기정화 결정에 맞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1년 전, 고려대 학생들은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기세등등하던 학교 당국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출교 처분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고려대 당국은 다시 출교생들에게 무기정화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3월 27일 고려대 상벌위원회는 우리가 출교와 퇴학 조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화로 “징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안팎의 거센 비판을 무시하고 결국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전 출교생 7명에 대한 무기정화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2006년 고려대 당국은 학생 활동가 7명을 패륜아로 마녀사냥하고 출교시켰다. 보수 언론들도 학생 운동 죽이기에 동참했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이 기회를 틈타 시도 때도 없이 징계 위협을 했고 실제로 한국외대, 동덕여대, 한신대에서 징계사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출교생들은 지난 2년 동안 천막농성을 하며 고려대 학생들과 단체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투쟁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당당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려대 당국은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며 출교를 퇴학으



무기정화 징계처분에 항의하는 출교생들. 가운데가 김지윤

사진 이윤선

로 바뀌 학생들을 무릎 꿇리려 했지만 법원조차 출교생들의 투쟁은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며 학교의 역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올해 2월 출교에 이은 퇴학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고려대 당국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고려대 학생들이 대거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올해 고려대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등 운동이 성장하자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다시 징

계한 것이다. 내가 촛불시위에 참가해 같은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괘씸죄’도 적용된 듯하다.

고려대 총장은 면담 신청 전에 기자회견을 했으며 면담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는 징계를 승인하고 곧장 해외 출장을 가 버렸다. 학생 3천 명이 참가한 등록금 인하 요구 서명조차 총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학교 당국이 얼마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의 학생 운동 탄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속 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해 보니 집권 1년차인 지난해 1백38명을 구속했고 올해 들어서도 21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수만을 단순 비교하자면 집권 첫 해에 2백4명을 구속한 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의 양상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어떤 완충지대도 남겨놓지 않은 채, 탄압의 대상과 범위를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 전체로 확산시켰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권인 언론과 사상·표현의 자유마저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구속된 노동자의 90퍼센트가량은 ‘촛

불 집회’와 노조가 개최한 집회 과정에서 구속됐다. 10퍼센트는 파업이나 농성 자체를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몰아 구속한 건이고, 국가보안법,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건 등 사상과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한 건도 있다.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을 규탄하는 여론이 제2의 촛불 항쟁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웠던 이명박 정권은 용산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아 구속하고,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시민들마저 “상습 시위꾼”으로 몰아 소환장을 날리며 구속하고 있다.

검찰이 “상습 시위꾼”이라면서 영장을 청구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도 있었다.

반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검

찰은 ‘성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사장을 비롯한 권력층 인사들을 조사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법원은 얼마 전 삼성의 하청업체인 평택의 동우 화인캠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 해고된 후 복직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 회사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하다 구속된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했다.

‘미네르바’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광우병 대책위’ 간부들에게 보석이 허가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돈도 권력도 없는 데다 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이나 조직조차 없는 ‘촛불시민’이라면 저들이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일어나는 배후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업주들의 인권유린과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경제 위기로 죽어가는 노동자·서민이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서민은 스스로 단결해서 파업이나 집회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지역과 부문의 장벽을 넘어 견고한 투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연대 투쟁의 전통을 복원시킨다면 경찰과 감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야비한 공안탄압을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다.



교육 격차 강화할 수능성적 공개

‘부자 맞춤 교육’에 날개를 달 수능성적 공개

지난 4월 15일 수능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에 날개를 달아줬다.

보수 언론은 수능성적 자료에서 특정 지역이 상위에 오른 원인을,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기숙형 자율학교에서 찾았다.

그러자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특목고와 기숙형 자립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놔다.

그런데 특목고의 연간 학비는 1천만 원에 육박한다. 서울에 있는 6개 외고의 지난해 평균 학비는 7백62만 원이었고 그 중 가장 비싼 대일외고는 9백95만 원이었다.

자사고는 더하다. 전국 6개 자사고

의 지난해 연간 학비가 8백87만 원이나 됐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의 연간 학비는 1천9백94만 원이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가 “고등

특목고의 연간 학비는 1천만 원에 육박한다. 서울에 있는 6개 외고의 지난해 평균 학비는 7백62만 원이었고 그 중 가장 비싼 대일외고는 9백95만 원이었다.

학교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을 보면 특목고에는 월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의 자녀가 46.9퍼센트나 됐다.

노동자·서민 자녀의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학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이들의 목표가 ‘부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 준다. 수능성적 공개는 여기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특목고 등에서 성적이 오른 게 “교장 리더십, 교사의 열정 등 학

교 효과”에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리고 이 ‘학교 효과’가 다른 지역과 일반 고등학교에도 번지길 바란다. 학교 간, 교사 간 ‘경쟁’ 해서 시험 점수 올리는 데 한몫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15일 ‘학교자율화 조치’에 맞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촛불에 데어 주춤거린 이명박 정부가 임시접수 경쟁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와 수능성적 공개는 청소년들을 ‘자살’과 ‘임시 스트레스’로 몰고 갈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청소년 4명이 성적 비판 등을 이유로 자살했다. 전교조가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천3백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7.6퍼센

트가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했고 23.5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7일치 사설에서 “수능성적 공개는 궁극적으로 학교 단위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전국 고등학교를 한 줄로 세우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더욱 죽어 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이유다.

나아가 일제고사와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드는 입시체제를 없애기 위해 대학 평준화 등 대학서열구조를 깨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최대현 주간 〈교육희망〉(전교조 발행) 기자



## 종합

쌍용차, 2천6백여 명 해고 계획 발표

#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걸고 점거 파업해야

## ▶ 1면에서 이어짐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량해고에 맞서야 한다. 무엇보다 쌍용차를 국유화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경제 위기 속에 주요 기업의 파산이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각국 정부들이 신속한 국유화를 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시티은행과 AIG를 국유화했다.

재벌,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4백5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올해 쌍용차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 8천8백억 원을 못 내놓을 이유는 없다. 공적자금은 재벌·부자 살리기보다 아니라 이처럼 노동자와 그 가족들,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게 마땅하다.

대량해고 계획이 발표된 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역대 최대인 86퍼센트였다.

그런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도부는 파업이 가결된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은 모든 협의가 결렬된 이후 실행에 옮길 최후의 카드”라고 밝혔다. 그러나 5월 8일 대량해고에 대한 노동부 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은 투쟁을 미룰 때가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의 목표가 대량해고이기 때문에 노조가 무엇을 더 양보한다 해서 고용을 보장해 줄 리는 없다. 노조가 22퍼센트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등 양보안을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대규모 해고 계획을 발표한 걸 보라.

쌍용차지부는 당장 위력적인 집회와 행동을 이어가며 조합원들의 분노와 자신감을 결집하고 끌어 올려야 한다. 그 점에서 쌍용차지부 지도부가 상경 투쟁과 부분파업 계획을 잡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장기휴업자 7백여 명도 이런 행동에 결함시켜야 한다.

당장 남아 있는 비정규직 3백여 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쌍용차 비정규직



4월 22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열린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총 촛불문화제

사진 이미지

지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통합하고 공동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참시켜야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지금 사무관리직부터 시작했고 공생산직으로 확대될 ‘희망퇴직’도 막아야 한다. 희망퇴직은 향후 복직될 수도 없는 ‘절망퇴직’이다. 좌절한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통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조합원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따라서 쌍용차지부 지도부는 부분파업을 넘어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점거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더는 정부와 사측이 노

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며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 노조 지도부는 점거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지금 프랑스에서는 대량해고를 추진하는 회사를 점거하고 사장을 감금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포드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국의 비스티온사 노동자들도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 파업을 벌이면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음식과 옷을 지원하고 곳곳에서 연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

요한 것도 연대다. 쌍용차의 오늘은 다른 작업장들의 내일이라는 점에서 금속노조와 특히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 점에서 금속노조 지도부가 쌍용차지부에 현실성있는 자구안(양보안)을 내라고 조언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안타깝다. 현대차·기아차·GM대우차 노조 지도부가 쌍용차 대량해고에 대해 즉각 규탄과 연대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금속노조와 현대차·기아차·GM대우차 노조는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서는 연대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경찰력 투입 등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

야 한다. 반값계도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5월 29일 연대 파업을 결정했는데 이런 계획은 더 앞당겨지고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건설하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도 모금 호소, 파켓팅과 규모 있는 연대 집회 조직 등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쌍용차 노동자 단 몇 명에게라도 해고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임성규 위원장의 약속은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강철규

대량해고 저지 투쟁의 교훈

## 점거 파업과 양보 협상은 판이한 결과를 낳았다

지난 경험은 단호한 점거 파업이 대량해고를 막았다는 사실과 협상을 하며 양보를 하다가는 투쟁할 기회만 놓칠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998년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이 포함된 양보안을 내놓고 희망퇴직까지 수용했지만 사측은 끝내 5천 명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댔다. 사측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무기한 점거 파업에 들어가고,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자 물러서기 시작했다. 정부도 부랴부랴 협상단을 파견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파업에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었고 결국 사측은 대량해고를 포기했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일부 정리해고를 인정하며 파업을 끝낸 것은 아쉽지만 36일간의 현대차 투쟁은 점거 파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 전술임을 보여 줬다.

1998년 한라그룹의 부도로 발생한 1천1백44명의 대량해고를 막아낸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투쟁도 갈 길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해고 방침 발표와 동시에 무기한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간의 파업 투쟁에 조합원 95퍼센

## 단호한 점거 파업이 대량해고를 막았고

## 협상을 하며 양보를 하다가는 투쟁할 기회만 놓쳤다.

트가 참가했다. 정부는 1만 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자 2천7백여 명을 연행하고 42명을 구속하고서야 가까스로 파업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사측이 한 발 물러나 1백5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했으나, 노동자들은 끝까지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고 대상자들은 무급 휴직으로 전환돼 이듬해 복직했다.

반면, 2001년 대우차 노조는 양보를 거듭하면서 투쟁의 기회를 놓친 사례다. 대우차 노조 지도부는 1999년 말 자금지원을 빌미로 사측이 요구한 ‘위크아웃 동의서’와 2000년 말 김대중 정부가 강요한 ‘구조조정 동의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사측은 1천7백5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 지도부의 거듭된 후퇴로 대우차 노동자들의 투지는 사라져갔다. 노동자들이 뒤늦게 파업을 시작하자 대우차 사측은 휴업을 단행하고 경찰을 공장 안으로 불러들였다.

더구나 사측은 노동자들이 주요 공장 시설을 점거할까 봐 치밀하게 대비를 해 둔 상태였다. 해고 명단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파업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고 결국 대우차 투쟁은 패배했다.

최근 위니아만도 노동자들의 파업 경험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위니아만도 노동자들은 4월 6일 95명 정리해고 명단 통보 직후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해고 통보자들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비해고자들에게는 “생산중단이 계속되면 부모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해고자와 비해고자를 분열시킨 것이다.

결국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노동자들의 이탈과 사측의 압력 속에 위니아만도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중단했고 50명의 해고를 받아들이는 잘못된 합의를 했다.

강철규

쌍용차 비정규직 활동가 인터뷰

##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유제선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유제선 교육선전부장

지난 4월 17일,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유제선 교육선전부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매달 빛이 수십만 원씩 들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신용불량자예요. “노동자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정권과 자본, 언론은 계속 ‘갈라치기’하고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올분이 치밀어요. 2명 중 1명인데, 아직도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은 오히려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자릅니다. 투쟁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죠.”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정리해고되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어요. 정규직이 비

정규직 해고될 때 팔짱 끼다가 막상 자신들이 해고될 것 같으니 투쟁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지지 못 받아요. 노동자면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금속을 넘어서 민주노총 전체가 나가 해야 해요.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며 싸워야 합니다.

“1퍼센트 부자에게는 구세주, 노동자에게 악몽인 이명박이라는 인간이 서민과 노동자를 말려 죽이려 합니다. 이럴수록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해요.

“정부에서 팔아먹고 중국(상하이)에서 기술 다 빼 갔는데, 그럼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안되면 국유화를 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해야죠. 20만 일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 가족까지 60만, 80만 생존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생존권을 지키는 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지 왜 쓸데없이 돈놀이 하는 데 수조 원을 쓰고, 땅 파는 데 14조 원을 투입합니까? 왜 미국놈들 여기(평택)로 이사 오는 데 수십조를 쓸니까.”

“쌍용차 투쟁이 강경하게 나가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귀감이 되면 좋겠어요. 박근혜 기자 | pkh@left21.com



정치

4·29 재보선 부평을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로는 유일한 수도권 격전지인 부평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후보 모두 자신이 GM대우 살리기의 책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후보 이재훈은 자신이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중앙부처와 금융기관에 특정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시 담당 정책부서”에 있던 인물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늉을 하는 것은 고양이와 쥐 생각해 주는 꼴이다. 실제로도 이명박 정부 ‘인맥’ 들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부추기고 비정규직악법을 더한층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재훈의 GM대우 살리기는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처럼 노동자·서민을 쥐어짜고 부자들만 배 불리는 구조조정을 뜻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GM대우 산업은행 인수안이 정확히 그렇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우고 노동자를 잘라서 다른 자본가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 홍영표가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홍영표는 자신의 대우차 노동자 경력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는 2천9백여원의 영업이익을 보고도 2조 원 대의 금융손실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GM대우 경영진에 대해 “환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감쌌다.

또, 홍영표는 노무현과 민주당이 추진한 한미FTA의 국내대책본부장을 지냈다.

한미FTA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포함해 의료·교육·물·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GM대우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살리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사진 출처 민주노동 인천지역본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늘리기와 정리해고), 공공부문 민영화(공공요금 폭등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규제 완화(환경파괴, 독점이익 유지, 감세 등)를 위한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한미FTA를 옹호한다.

### 사퇴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만이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방점을 두고 노동자 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도 지키는 ‘총고용보장’을 대안으로 제

시했다.

최근 GM대우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노·사 합의를 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이를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도 1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일부 NGO를 통해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를 ‘달’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노동당이 반MB 단일화를 위해 후보

를 사퇴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응호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연차 리스트를 통해 민주당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는데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다?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올바른 태도다. 마지막까지 그 입장이 확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한나라당·민주당 같은 자본가들의 정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번 부평을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반MB 민주연합의 승리인가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반MB’를 표방한 진보 후보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면, 선거에 패배한 보수 진영은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보수 진영은 투표율이 낮았으며 그 의미를 폄하하더니, 이제는 김상곤 당선인의 진보적 정책들에 공공연히 회방놓으려 나서고 있다.

김상곤 당선인이 고양 국제고 설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언론들은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고양시장 관계자는 “항의전화 움직임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를 동안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진보 진영은 단결과 투쟁을 통해 진보적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물러서거나 타협하려 하면 우익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공세에 나설 것이 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진영은 이번 선거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올바르게 평가하고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과가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반MB로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상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쌍용차 노동자 투쟁을 지지 방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그러나 김상곤 당선인이 민주당과 연합에 연연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선거 초반의 ‘교육은 경영’이라거나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 신나게’ 같은 두루뭉술한 구호를 계속 내걸고 진보 후보임을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았다면 진보적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박연차 게이트로 민주당에 대한 환멸이 극심해지고 있었다.

지금 우익들의 공세에 맞서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과 전략적 공조는 도움

이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MB식 경쟁·시장 교육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계급 투표와 전교조의 승리

〈시사IN〉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 지역에서 김상곤 당선인이 큰 성과를 낸 것을 두고 “계급 투표는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상곤 당선인은 민주노동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경기도 건설노조와 화성 기아차 노조 등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꼼꼼한 계급 투표를 조직했다. 이번 선거는 이런 계급 투표의 승리다.

〈민중의소리〉나 〈시사IN〉이 “‘전교조 후보’ 프레임이 이번 선거에서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표를 조직하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지지하며 일제고사와 경쟁교육 반대를 내건 후보를 ‘전교조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전교조의 승리이기도 하다.

김형택 진보신당 경기도당 전 위원장은 낮은 투표율을 이유로 이번 선거가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직투표의 승리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후보단일화도 하는 마당에 1백만 명이 참가한 선거 결과가 어찌 민심의 반영이 아니란 말인가.

게다가 조직투표는 오히려 그 공을 사취하는 부분이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이 급진적 주장을 내걸고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이명박의 친재벌·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맞서야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강동훈 기자 | kdhn@left21.com

박연차·노무현 게이트

##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6백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노무현과 그 일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일부는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 귀족’ 등의 용어를 쓰며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쪽도 노무현 비리를 단죄할 처지가 못 된다.

〈시사저널〉은 ‘형님’ 이상득이 노건평과 ‘밀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상득은 지금도 노건평과 만난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 이상득은 추부길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추부길은 통화했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은 ‘형님’ 앞에서 사라졌다.

이명박의 측근인 세중나모여행 회장 천신일이 대선 직전 박연차에게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뉴스테스크). 대선 당시 천신일이 이명박에게 빌려준 30억 원이 바로 그 돈 아니냐는 것이다.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 방송특보단장을 지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도 박연차에게서 여러 번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국민일보).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종찬은 천신일과 함께 박연차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고 천신일이 그 직후에 이명박과 같이 여름 휴가를 간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도 고위 간부 예닐곱 명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상률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났고 검찰은 이를 막지 않았다.

이 모든 의혹이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오로지 부패에서 자유로운 진보 진영이 아래로부터 투쟁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의 처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미국은 결국 9일 만에, 제재 결의 대신 구속력 없는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북한 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의장 성명은 말에 그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강경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행동은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의 촉매 구실을 할 수 있는 등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북한 비난에 동조할 수는 없다.

인공위성을 군사적 목적으로 앞장서 사용해 온 강대국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로켓 발사를 둘러싼 비난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0일에는 인도가 첩보위성을 쏘아 올렸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제재 움직임도 없었다. 인도는 2006년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해에 중국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자마자 달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행위자로 새롭게 떠올랐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강경하게 비난한 것과 달리 비슷한 시기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를 동맹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첩보위성 발사에도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 점점 관리하기 어려운 북한 ‘위협’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강경하게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나 동북아 평화 등의 명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북한을 ‘악마화’ 해 왔다.

미국은 냉전 해체 이후, 소련 블록에 대항한다는 미일 동맹의 명분이 약해지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추겨 동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도록 내몰았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갖춘 ‘위

협’적 존재가 됐다.

군사적 초강대국 미국에게 북한 ‘위협’이란 군사력 자체보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과 관련돼 있다. 미국은 1990년대에 ‘북한 위협’을 미일 동맹을 묶어둘 소재로 활용해 왔지만, 이제 북한 문제는 미국에게 매우 골치아픈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일본 우익들은 ‘북한 위협’이 불거질 때마다 독자적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일 동맹은 이렇듯 매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2기 부시 정부 하의 미국이 중동 전선에 발목이 묶여 있는 동안, 현상 유지 수준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고 허용한 다자주의적 틀이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하려 해도, 6자 회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포한 북한을 회담장에 끌어들이려 해도, 모두 중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세력 관계는 이번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반대하자, 결국 미국이 의장 성명 수준으로 수위를 낮춰야만 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라크 등에 발목이 묶여 북한에 대한 전면적 군사적 공격을 하기도 어려운 처지지만, 자신의 패권이 추락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북한에 실질적으로 양보하지도 않은 채 시간 끌기 성격의 회담과 압박을 반복해 왔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압박과 무시를 참기 어려운 북한의 대응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들 나라들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반대했지만, 이들은 단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로 자국 주변에 미국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뿐이다.

미국이 북한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동아시아에서 통제력을 더욱 잃어 갈수록 주변 강대국들은 각자 자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더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들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 등 강대국들의 각축전이야말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낳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군사적 방식이든 외교적 방식이든,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미군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장면.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부를 수 있다.

##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력 수준을 과장해 군비 증강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무장한 국가다. 2007년 미국 CIA의 보고를 보면, 남한은 세계 9위의 군사대국으로 꼽히는 반면, 북한은 18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 8위의 군비 지출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

서 남한의 군사력 증강이야말로 더 큰 위협이다. 또한 이는 일본과 중국 등의 연쇄적 군비 증강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2003년부터 북한 등을 대상으로 펼친 ‘맞춤형 봉쇄’ 작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려 한다. 북한이 남한 정부의 PSI 참가에 대해 “선전 포고로 여길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면 참여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심지어 4월 21일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경고를 다시 듣고서도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예 북한더러 PSI에 동참하라는 황당한 동문서답만 늘어놓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강대국들의 대량살상무기는 버섯

이 운반을 허용하는 위선적 압박 정책이다. 이런 위선적 압박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다면, 당장 북한의 반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남한 해군이 북한 선박을 수색하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부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 정국을 이용해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사법부는 얼마 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들에게 징역 2년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군비증강 시도와 PSI 전면 참여에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활동가들에게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하려는 것에 단결해 대응해야 한다.

#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의 북한 비난은 위선일 뿐 아니라, 실제 강대국들이야말로 온갖 대량살상무기와 제국주의적 전쟁·점령·압박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훨씬 큰 악이다. 남한 정부도 이 같은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강대국들과 남한 정부의 위선적 북한 비난과 이를 빌미로 한 군비 증강에 분명히 반대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북한 위협을 자국 내의 탄압에 활용하는 데도 일치단결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정부가 ‘일심화’ 사건을 통해 민주노동당 자주화 활동가들을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할 때, 지금의 진보신당 지도부가 활동가들을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을 분당의 계기로 삼았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

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당국자들 간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당국자들 간 회담으로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전선에 집중하는 것을 대외정책 1순위로 삼고 있다.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은 미국은 또다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회담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설령 회담에서 양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하느냐 여부도 미지수다. 미국은 지난 어떤 회담에서도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 진영 단체들은 앞으로 조성될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긍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로켓 발사 이후 정국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대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으로 끔찍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촉매 구실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뤄진 회담은 향후 이어질 더 커다란 수준의 긴장 고조의 서막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강경 대응은 부차적 ‘위협’ 이긴 해도, 노동자·민중 운동이 결코 옹호할 수는 없는 행위다.

게다가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이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이윤과 패권을 위해 경제적·군사적 경쟁을 일삼으며 대중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당국자들의 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고 체제가 낳은 또 다른 모순인 착취와 불평등에 맞선 투쟁과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노동

# 부산 대우버스 점거 파업 승리를 위한 과제

4월 23일 현재 부산 대우버스 노동조합이 26일째, 대우버스 사무직 지회가 1백63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버스는 2001년 대우차가 매각되면서 분리됐고, ‘미국 간첩 사건’으로 유명한 영안모자 백성학이 2003년 인수했다. 대우버스는 국내 버스시장 선두 주자로, 설립 이후 매년 흑자를 냈다. 특히 2007년 1백71억 원, 2008년 81억 원 등 설립 이후 최대 흑자를 보았고 2009년 3월 수출도 전년대비 38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불황을 핑계로 적자가 예상된다며 9백28명 중 무려 절반이 넘는 5백7명(55퍼센트)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고, 4월 9일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이에 맞서 대우버스 노동자 8백여 명은 4월 9일 부산 전포, 동래 공장을 단호하게 점거했고, 울산공장 앞에서는 집회를 하고 공장 안으로 행진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력 투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4월 15일에는 급속노조 노동자 1천여 명이 모여 ‘총고용 보장’ 급속노조

결의대회도 열었다.

대우버스 사무지회 윤덕중 부지회장은 “대우버스의 구조조정은 부산, 경남지역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려면 울산공장을 타격하는 게 중요하다. 대우버스는 부산에 세 공장(전포, 동래, 반여)과 울산에 한 공장이 있다. 이전 대우버스 노조 지도부는 2006년에 부산 공장에서 ‘물량과 상관없이 월 56시간의 OT[초과근무]를 보장한다’는 사망발립 약속을 받으며 울산공장 비정규직 배치와 생산을 인정하는 잘못된 합의를 했다.

합의 이후 울산공장은 2백50명의 비정규직으로만 운영되는 공장이 됐다. 고삐가 풀린 사측은 차근차근 물량과 주력 품목을 울산공장과 해외법인으로 이전했고, 부산 공장이 연 2천 대를 생산할 때 울산공장은 3천 대를 생산하게 됐다. 결국

지난해부터 부산 공장 노동자들은 물량이 줄면서 월급이 약 1백20여만 원으로 줄었다. 부산 공장이 점거파업을 해도 울산공장의 생산이 계속돼 타격이 크지 않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잘못된 합의가 정규직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내걸고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하고 산별노조로 조직해야 한다. 급속노조는 부산 공장의 점거 파업을 엄호하면서 이런 연대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두려운 사측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할 때는 비정규직을 출근시키지 않으며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묵묵히 일해 온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런 시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단호한 파업으로 이윤에 타격을 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박수원 부산 현장 통신원



점거 파업중인 8백여 명의 대우버스 노동자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 먹튀 자본에 맞선 OB맥주 노동자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OB맥주 노동자들이 OB맥주 매각과 관련해 고용보장과 매각 차익의 10퍼센트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4월 20일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OB맥주의 최대주주인 인베브는 지난 1998년에 1조 2천5백억 원에 OB맥주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감자를 통해 1천5백억 원, 배당금으로 약 1천9백 70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각가를 형성하고 있으니 그동안 인베브가 냈을 법인세 등을 고려해도 인베브는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것이다. 더욱이 인베브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세금 한 톨 내지 않을 것이다.

매각 차익의 10퍼센트 재분배를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보수 언론은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 투기자본들의 횡포를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뼈저리게 학습한 바 있다. 그들은 최대 이윤만 추구하고 자본을 철수하기 때문에 ‘먹튀’라고 부른다. 먹튀 자본이 철수하고 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곤 했다. 4년간 동결된 임금, 시장점유율 40퍼센트를 웃돌 만큼 높은 성장 실적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대 과도하지 않으며 전적으

로 정당하다.

OB맥주는 조합원 6백 명이 한국노총 산하의 OB맥주노조에, 조합원 8백 명은 OB맥주로 매각되기 전 진로 시절부터 있던 민주노총 OB맥주지회에 소속돼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져 있지만, OB맥주비상대책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끈끈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민주노총 OB맥주지회 장경련 부지회장은 “소속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비대위 지도부의 지침에 모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노총 OB맥주노조 김기형 정책실장도 “1천4백 명의 조합원으로 통칭될 정도로 화합적 결합과 연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투쟁에 임하는 조합원들의 결연한 모습에서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자신했다. 현장 조합원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한 조합원은 “누가 어떤 소속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을 만큼 노동자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4월 24일로 예정된 본계약이 4월 말로 연기됨에 따라 22일 오전 OB맥주노조 비대위는 파업을 잠시 중단했지만 향후 매각의 실체를 보며 다시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야말로 매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위협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정당한 OB맥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윤세홍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투쟁에서

## 왜 점거 파업이 중요한가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은 고용·단협·노조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거 파업은 최상의 파업 전술 중 하나다. 점거 파업은, “사전에 알려거나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지도 않고 파업을 시작한 후, 기계나 일관작업대[조립라인] 옆에 앉아 파업으로 마비된 공장 안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다. 비록 단순했지만, 파업이 갖는 특성과 힘을 모두 갖춘 방법이었다. 공장 안에서 연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눈과 비와 추위와 더위를 피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파업을 깨뜨리려는 경찰과 자경단원[구사대]의 공격으로부터도 역시 안전했다. 노동자들은 기계 앞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이 기계 앞에 있는 한 어떤 파업 파괴자도 파업 대열을 깨뜨릴 수 없었다. 공장은 요새나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이 공격을 당하면 자신들의 기계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고용주들의 두려움 때문에 공장은 비교적 지키기도 쉬웠다.”(리처드 O 보이어·하버드 M 모레이스,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 이야기》, 책갈피, 324쪽.)

1936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점거 파업의 경험과 교훈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점거 파업은 직장 이탈 파업보다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파업 노동자들이 기계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파업 파괴자들을 이용한 공장 가동을 막을 수 있다. 또, 사측이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공장을 어워싸고 있는 피켓 라인 밖으로 내쫓기가 매우 어렵다.

점거 파업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린다. 그들은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파업 파괴자들이 기계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 그들은 실로 자기 일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것은 높은 수준의 연대와 전투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공장 점거는 더 많은 노동조합원들의 참가를 끌어낸다. 그것은 투쟁의 열정을 고무한다. 일반적으로 그 쟁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점거를 통해 유용한 경영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점거 파업은 파업의 민주적 성격을 강화한다. 파업 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 언제든지 모여 대중 집회를 열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장 밖에 있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파업의 종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점거 파업은 피켓 라인을 유지하는 데도 더 낫다. 파업에서 피켓 라인은 사용자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사용자의 대체 인력 투입 저지), 무엇보다 사장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고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자동차를 만들고 열차를 운전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점거 파업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을 설득·제압·견인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점거 파업은 연대 행동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점거 그 자체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값비싼 공장 시설, 장비, 완제품 들을 파업 노동자들이 통제할 경우 사용자들은 작업장 폐쇄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대우버스 사측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또, 공장 점거는 막대한 회사 자산, 거대한 조립 라인, 미완제품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사장들은 경찰력 투입 같은 폭력을 통한 파업 파괴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

따라서 점거 파업은 재정 지원과 연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노동자들을 이 쟁의에 끌어들여야 한다. 상급 연맹과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를 무시한다면 점거 파업은 고립될 것이고 결국 패배할 것이다.

### 타이밍이 결정적

한편, 점거 파업은 타이밍이 결정적이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맞서 싸우는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기업들은 공장 점거 대책 메뉴얼을 갖고 있다.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해 두고, 서류·기록물 등에 대한 보안을 점검해 둘 것이며, 노조원들에 대한 감시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노조는 6월에 있을 해고 통보 시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점거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위니아만도 노조는 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 통보가 있는 후에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그때는 이미 해고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균열이 생겨난 뒤였다.

물론 많은 조합원들이 점거 파업에 회의적일 수 있다. 그들은 합법성과 전통적 인습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법적으로도 사장의 의사를 거슬러 작업장 점거를 할 경우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노동자들이 법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점거 파업의 경제적·정치적 파급 효과가 커지면 사용자는 조만간 파업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을 궁리를 한다. 이때 경찰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점거가 강력할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할 것이고 더 많은 연대를 건설할 수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질수록 사용자가 법률과 경찰력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1998년 현대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전국에서 울산으로 이동 배치된 수만 명의 경찰조차 결국 공장 진입을 포기했다.

물론 점거 파업의 이점은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보통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점거 파업도 잘 조직되지 않으면 무관심, 지루함, 파업에 대한 지지 약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체제가 엄청난 불합리성과 비정함을 보여 주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인식 | kis@left21.com

**피켓 라인**  
사용자의 대체 인력 투입은 물론 파업 참가자의 파업 이탈을 막기 위한 특별한 감시단이다.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다리가 통통 붓도록 일해 온 비정규직을 영원히 부려 먹겠다는 정부 사진 이미지

# ‘해고보다 비정규직이 낫다’는 정부·여당이 바로 “진짜 철밥통”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을 추진하다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은 최근 법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부칙조항 수정으로 사회적 반발을 피해 가려는 꼼수이며 이명박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미 정부가 앞장서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10개월짜리 인턴만 뽑고 있다.

애초에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반대하며 경고한 대로 노무현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악법은 기업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용역화와 차별을 영구화하는 무기계약직화하는 데 이용돼 왔다. 이랜드, KTX여승무원, 기륭전자,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악법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악법을 폐기하고 차별을 철폐하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 ‘2년간 부려먹다가 마음대로 짜르는’ 것도 양에 차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4년간 우려먹고 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 60세 이상 노동자, 6개월 이하 수습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삭감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서 부자만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그 점에서 4월 15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조직력, 투쟁력 상태는 창립 이래 최악”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4월에는 총파업 투쟁 못한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유감스럽다. 조직력과 투쟁력은 투쟁 속에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다가 현장의 불신과 환멸만을 키우고, 조직력이 약해진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성향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해고자

## 서수경

(여/38, 민주노총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장/ 축탁직 4년, 일반조교로 7년 근무)

“명지대측은 길게는 14년간 일해 온 일반조교들을 해고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 ‘행정보조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데도, 1~2년마다 사람을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학측은 그동안 십수 년씩, 열심히 일해 온 우리를 해고할 때 ‘후배들도 먹고 살게 그만 물러나라’고 했어요. 7년 일하고도 한 달에 1백만 원 받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심지어, 조교를 자르면서 커피머신으로 대체하면 된다고도 했어요.

‘해고보다는 비정규직이 낫다’고 말하는 이영희 장관부터 비정규직으로 살아보라고 하세요, 저녁에 남아 일해도 초과수당은 고사하고, 정규직원들에게 주는 밥조차도 알아서 주질 않았어요. 건강검진권도 정규직원에게만 주고요. 잘리지 않으려고, 온갖 차별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십수 년씩 일해 왔는데, 비정규직이라서 제일 먼저 해고된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삶을 계속 살라

고 하는 분들이 진짜 철밥통들이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있고, 평생 해고되는 것이 뭘지 알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자르라는 결정을 하고 있어요. 83만 원도 아까워서 최저임금도 깎겠다고 하니 저러다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터지면, 자기들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만 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주변에서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힘들고 지치는 것은 둘째치고, 효과가 나기 어렵다고 봐요. 정규직, 비정규직, 서민들 모두 관심가지고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일을 우리 아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 정찬희

(여/29, 국립오페라단합창단 소프라노 2년차)

“2009년 2월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해고 통보서를 받았어요. 2008년 12월31일자로 해고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 첫 직장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대에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저에게 무대는 목숨과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야 하는데, 국내 유일한 오페라합창단인데도 해체하는 걸 봐도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잖아요. 요새 경제 어렵고, 세상 살기 더 힘든데,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인데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월급 70만 원으로도 마음과 열정을 바쳐서 일했는데, 그것마저도 문화관광부와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42명의 음악가들에게서 빼앗아 갔어요. 우리들의 삶이 터전이고, 내 자신이기도 한 무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 이현진 (가명)

(여/31,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 9년차)

“비정규직들이 (해고보다는) 기간연장을 바란다구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기업 위주로만 얘기하는 거죠. 경기 나빠서 다들 찢리고 비정규직은 1순위이니 정말 불안해요. 이제 (정식직원) 뭉탈말랑했는데, 자기를 맘대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청년인턴제가 더 문제예요. 해마다 있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은 없어지고 한달에 1백 20만 원 받는 인턴 23명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인턴을 앉혔어요. 10개월짜리 인턴에게 일을 가르쳐줄 수도 없고, 직원들은 이를 걸려야 근에, 주말근무에 빠르게 일하는 터라, 어정쩡한 인턴만 곤혹스럽죠. 게다가 인턴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공공기관 선진화 때문에 신규채용이 있거나 하겠어요? 잘려나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정말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고 싶어요.”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회연대전략’

# 양보와 협상이 아니라 단결과 투쟁을 통한 ‘사회연대’가 돼야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사회연대노총’과 ‘사회연대전략’을 내걸었다. 임성규 지도부가 첫 사업으로 광범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메이데이 투쟁을 강조했기에 ‘사회연대’는 단결과 투쟁을 뜻하는 듯했다.

더구나 임성규 위원장은 4월 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양보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직이 무얼 믿고 양보하나”며 “정규직에게 ... 더 강력한 투쟁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우려했게도 최근 임성규 위원장의 말과 태도에서 ‘양보와 협상’을 통한 사회연대’ 방향도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임성규 위원장은 4월 14일 <레디앙> 인터뷰에서 “우리 밥 몇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이 생긴다. 기업의 직접 지불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임금노선에서 사회임

금·사회임금’을 늘리기 위해 저들의 양보를 요구하며 조직 노동자가 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과 강력히 단결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소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와 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의 고작 8퍼센트(스웨덴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임성규 위원장의 지적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이것이 임금 인상 요구와 투쟁을 꺾어하는 것으로 나아갈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열악한 사회복지 속에 경제 위기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다.(기본급은 2005년 현재 노르웨이의 3분의 1 수준.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07>) 더구나 2007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임금 3백28만원은, 3.7인 가족 기준 표준생계비 4백36만 원의 75퍼센트에 그친다. 따라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민주노총 노동자들 임금 수준의 사회적 구실을 봐도 그렇다. 정용건 사무총장 연맹 위원장은 “30대 그룹 임금은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의 바로미터”이기에 대기업 대졸초임 삭감은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들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 ‘바로미터’를 지키고 더 끌어올릴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양보해야 할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주와 부자들이다. 지난해 30대 기업 사

내이사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이 넘었다. 현대차 회장 정몽구는 올해 주식배당금으로 2백88억 원을 받았다. 대량해고를 앞둔 쌍용차 임원들의 지난해 연봉도 2억5천만 원이 넘었다.

## 기업임금과 사회임금

따라서 ‘사회임금’을 늘리기 위해 저들의 양보를 요구하며 조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여성·이주 노동자 등과 강력히 단결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직접임금’인상을 위한 조직 노동자들의 힘과 자신감을 이룬 ‘사회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도 쓸 수 있다.

그 점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단결과 투쟁에 분명한 중심을 두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영희를 만나 대화들을 복원한 임 위원장은 4월 15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해도]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4월에는 총파업 투쟁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과 쌍용차 대량해고 등을 몰아치는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을 중시하는 노선이며 비정규직법 개악에 비타협적인 결사 투쟁으로 맞서는 자세다.

비정규직 투사들이 해고를 규탄하다 경찰에 끌려간 모터쇼장에서 사장과 함께 서서 “쓰레크가 잘 팔려야 회사와 노동도 잘됩니다” 하고 말한 김종석 기아차지부장,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이어질 전환배치를 회사와 대화를 통해 합의한 GM대우차지부 지도부의 태도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길이다.

따라서 임성규 위원장이 메이데이 때 발표해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사회연대전략’에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조직 노동자·사회적 약자의 강력한 단결 투쟁과 총파업 선언을 담아야 마땅하다.

전지윤 | ratm71@left21.com



# 대중행동을 위한 요구들

경제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황의 골은 더 깊어 가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미치광이 운전수(기업주들)와 무능하고 부패한 교통경찰(각국 정부)의 책임이며, 멋대로 운전하도록 방치하던 엉터리 신호체계(신자유주의) 탓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모순투성이인 체제 속에서 시달려 온 노동자·서민들은 지금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현재 각국 정부는 노동자·서민들에게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고 안달이다. 재벌·부자들

에게는 세금을, 밑바닥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깎아 주려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텅 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정부가 투기꾼들에게 온갖 지원을 해대지만,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 노동자들은 집한 채 없이 떠도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 거꾸로 된 체제에서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텅 빈 주택들을 집 없는 서민에게 주고,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수백조 원의 잉여금으로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요구들은 바로 이처럼 저들의 우선순위를 뒤집으며 저항과 연대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이 요구 자체는 이윤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삶을 우선하는 이 요구들과 이를 위한 대중투쟁의 논리는 체제의 논리와 충돌한다. 따라서 기업주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가와 충돌한다. 그럴 때 우리는 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이 것인가 근본적으로 거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간다. 그

점에서 이 요구들은 노동자·서민들의 현재 의식과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물론 요구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투쟁 속에서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시장도 국가도 여기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라는 야만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전환적 요구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며 이런 요구들을 둘러싼 대중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 물가통제, 실질임금 삭감 반대

고물가가 낳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임금 동결 및 삭감에 반대한다. 회사가 임금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기존 임금을 보존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와 고용 안정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우선해고를 포함해 일체의 해고를 금지하고 정년 단축을 반대해야 한다.

##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로 일자리 창출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제는 잔업·특근 수당을 포함하는 기존의 월급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확대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보급으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청년실업자들은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부도기업의 국유화

부도·파산 위험에 있는 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대폭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평균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임대주택, 국민연금 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 탕감, 기초노령연금 적용 대상과 급여 확대, 실업급여 인상과 급여기간 연장·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은 기업주와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확대와 재벌잉여금 환수 등으로 마련한다.

## 부자들을 위한 교육 반대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국제중·자사고·특목고 등으로 서열화와 교육 불평



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중등교육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이하)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여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주요 시설 점거 금지·정치파업 금지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모든 노동약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 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재국유화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은 이윤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의 삶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

미 민영화한 부분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파시키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정치적·시민적 권리 보장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성희롱·낙태금지법·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것을 반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미국과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미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모든 점령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점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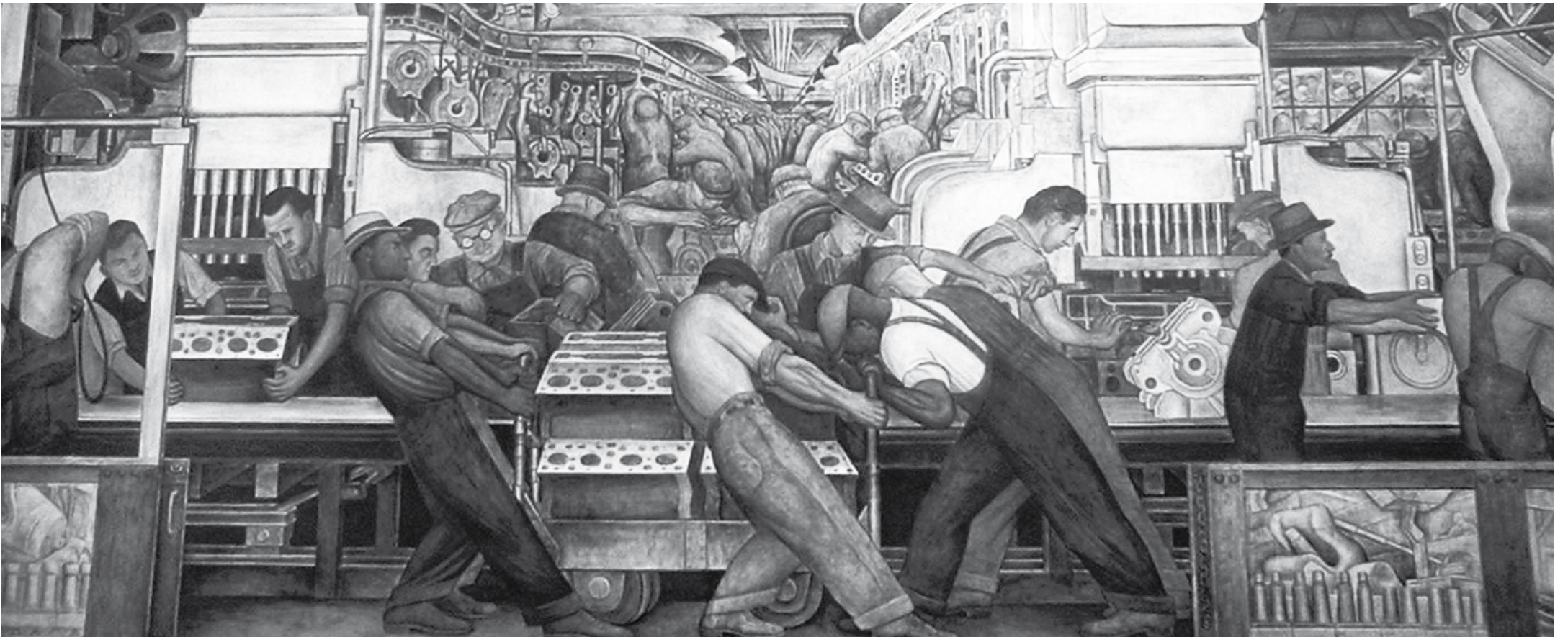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북한의 위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 존 몰리뉴의 맑스주의로 세상 읽기



디에고 리베라의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부분)

# 왜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 존 몰리뉴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단 하나의 계급”이라고 했고,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에서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했고, 〈고타 강령 비판〉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행기에는 “오직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실을 강조한 사상을 두고 레닌은 “맑스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으로, 헤르베르트 마르크제나 T W 아도르노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지식인들은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체제의 세뇌교육과 매수 때문에 노동계급이 이제는 가망이 없어졌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한편으로 평범한 사람들, 즉 노동자들 자신도 “사회주의는 불가능해!” 하고 한 마디로 일축한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동계급 대중이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거나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고, 대중매체나 교육 제도, 우리 사회 전체에 널리 퍼진 자본주의 세계관이다. 특히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조건은 그런 생각을 더욱 강화한다. 또, 그런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노동계급 대중의 생활 경험을 많이 반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레닌은 옳았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은 맑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사상이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이 없는 경제·역사 이론은 모두 세계 변혁 수단이 아니라 기껏해야 세계에 대한 수동적 논평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주의처럼 다른 계급(국가 자본가 관료 집단이 대표적이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만다. 맑스가 노동계급을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라고 말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지를 따져 보자.

###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은 맑스주의의 핵심 사상

먼저, 맑스의 견해는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겠

다. 맑스는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시기에 우리 대다수는 지배계급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노동자 대중은 사회주의 의식 때문에 혁명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투쟁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의식을 깨우치게 만든다. 사회주의 의식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억압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물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라린 고통을 겪기 마련이고 맑스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싸운다. 그러나 농민·농노·노예도 문명의 여명기부터 빈곤과 억압에 시달려 왔고, 역사는 그들이 계급 분열을 폐지하거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경제적 위치에서 비롯하는 잠재적 능력 덕분에 혁명적 계급이 될 수 있었다.

맑스가 입증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을 뿐 아니라 착취도 당한다. 맑스가 잉여가치라고 부른 부(富)는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뽑아낸 것이다.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 계급의 모든 이윤의 원천이고 자본주의 전체의 부도 대부분 이 잉여가치에서 나온다. 따라서 부르주아지에게는 노동계급이 절대로 필요하다(물론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계급으로서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특별한 산물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생산자이기도 하다.

착취 때문에 노동계급은 또, 자본주의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착취 때문에 노동과 자본은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결국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충돌은 맑스가 말했듯이 “때로는 공공연한 또 때로는 은밀한” 산업 투쟁과 정치 투쟁으로 비화한다. 대부분의 시기에 이런 투쟁에서 부르주아지가 승리한다. 그들이 부와 국가 권력(법률·경찰·사법부·군대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아무리 많이 노동계급을 패배시킨다 해도 그들은 노동계급의 노동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노동계급도 성장해서 결국은 사회의 다수가 된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의 수를 늘릴 뿐 아니라 대규모 작업장과 대도시로 노동계급을 집중시킨다. 이 때문에 현대의 노동계급은 고립분산적인 농민이나 소규모 작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경제적 위치에서 비롯하는 잠재적 능력 덕분에 혁명적 계급이 될 수 있었다.

업장에 고용된 과거의 장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힘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부정적 힘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긍정적 힘이기도 하다. 경제적·사회적 위치 덕분에 노동계급은 집단적 계급이다. 그들이 사용자들에 맞서 저항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이고 그들이 현대 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집단적 방식, 즉 현대 산업을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것뿐이다. 농민들은 봉건 영주에게서 빼앗은 토지를 자기들끼리 분할해서 소규모 농장으로 만들었다. 현대 산업은 그렇게 분할할 수 없다. 더욱이, 모든 현대 사회에서 정치 권력의 기반은 대도시에 있고 주요 생산수단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도시의 산업 프롤레타리아라는 성격 덕분에 노동계급은 여전히 주요 생산 계급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정치 권력(프롤레타리아 독재 — 지은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노동계급은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의 분열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그래서 완전히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간다.

### 중요한 것은 노동의 성격이 아니라 생산관계

이것이 1백50년도 더 전에 맑스가 주장한 핵심 내용이다. 그때 이후로 노동계급은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혁명적 구실을 했다. 1871년의 파리 코뮌,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1919~24년의 독일 혁명, 1936년의 스페인 혁명, 1956년의 헝가리 혁명, 1974년의 포르투갈 혁명에서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맑스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평론가·전문가·학자들이 넘쳐난다.

여담으로 한 마디 하자면, 40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맑스주의자가 됐을 때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맑스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 후로 나는 단 한 순간도 맑스가 시

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옳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노동계급이 맑스 시대처럼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혁명적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물론 유럽과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 노동계급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은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그런 임금을 보장받으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임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단적 투쟁에 나설 수 있고, 그런 투쟁이 혁명적 행동과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또, 광산업·철강업·항만업 등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더는 인구의 다수가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특정 노동 형태를 기준으로 노동계급을 정의하는 피상적이고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육체 노동이든 화이트칼라 노동이든 중요한 것은 노동의 성격이 아니라 생산관계다. 폴센터·수퍼마켓·병원·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광원이나 자동차 노동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착취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파업에 들어간 폴센터 노동자들과 수퍼마켓 노동자들은 자기 기업주의 이윤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은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완전히 상반된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서울·팔라룸푸르·카이로·요하네스버그·멕시코시티·상파울루 같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대도시에서 노동계급이 급증했고 이제는 중국(과 그보다는 못하지만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훨씬 더 증가했다. 오늘날 세계 노동계급은 맑스나 레닌 시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고 국제적으로 더 통합됐고 잠재적으로 더 강력해졌다. 지금 세계 노동계급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편집자 주] 5월 2일 촛불 1주년을 맞아 마지막 촛불 수배자이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행진팀장인 김광일 씨가 <레포트21>에 촛불을 평가하는 편지를 보내 왔다. 얼마전에 보석으로 석방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박원석·한용진 공동상황실장의 인터뷰와 함께 신는다. <레포트21> 독자들이 촛불 주역들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08 촛불시위를 돌아보며, 또 다른 저항의 미래를 생각한다



김광일  
(촛불 마지막 수배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행진팀장)

2008년 5월 2일부터 하나의 유명이 한국을 배회했다 — 촛불이라는 유명이. 한국 지배계급의 모든 세력이 이 유명의 사냥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 이명박, 어청수, 신영철과 검찰, 조중동, 전경련 등 자본가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촛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먼저, 촛

불시위가 폭발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폭발 배경**  
**새 천년 이후 벌어진 거리의 대중적 정치 운동들 — 2002년 말 여중생 압사 항의 운동, 2003~2004년 파병반대 반전 운동,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 등 — 이 2008년 촛불시위의 중요한 역사적 연료다.**  
촛불시위는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화했지만, 사실 이 정책들의 기반은 모두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닦아 놨다. 시위의 촉발점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의 선결 조건이었다.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연속성을 띠다면, 반신자유주의의 저항의 연속성도 따져 봐야 한다.

2007년 여름 뉴로아·이랜드 여성 조합원들의 매장 점거 투쟁도 높은 지지 속에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을 전 사회적 정

점으로 끌어올렸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집권하고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런 선거 결과에 주요 진보 단체 — 시민단체,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 들은 ‘진보·개혁 세력의 패배’와 ‘보수화론’ 등을 제기하며 사기저하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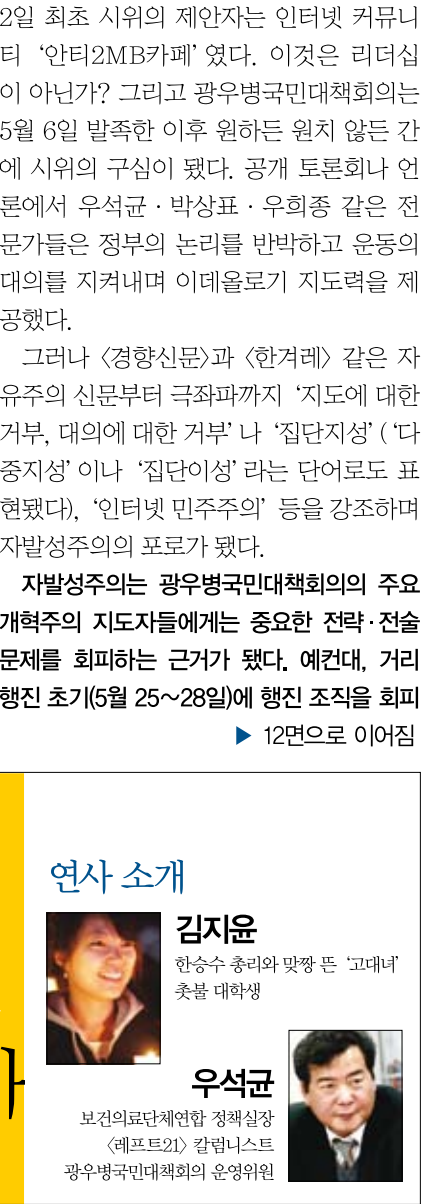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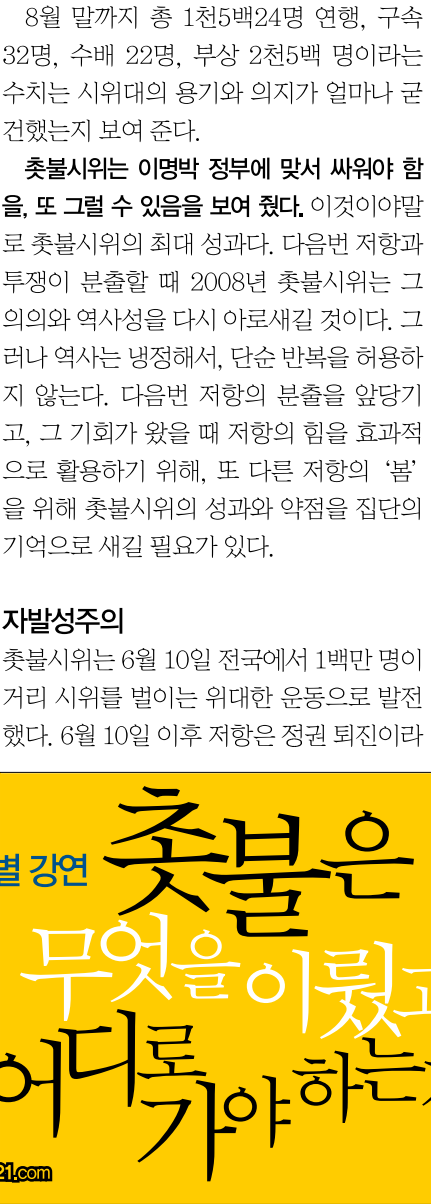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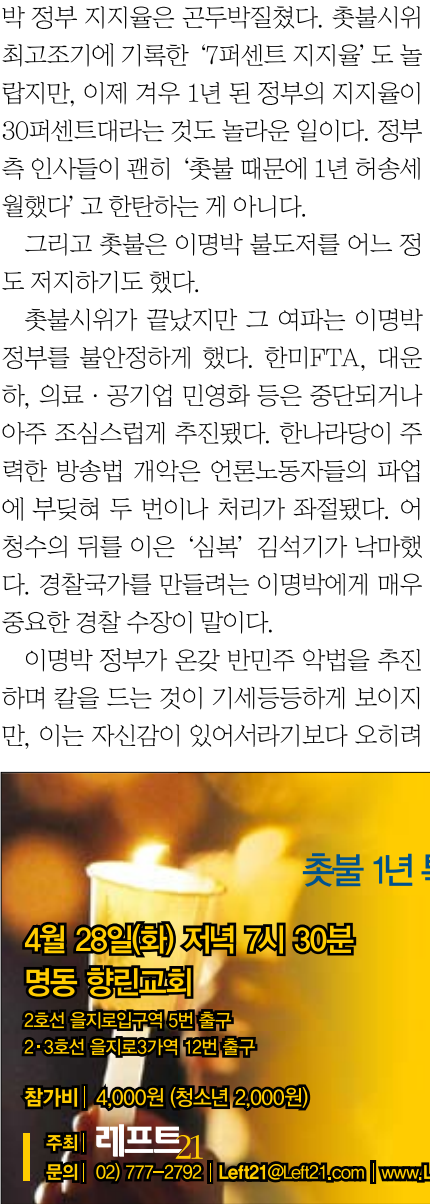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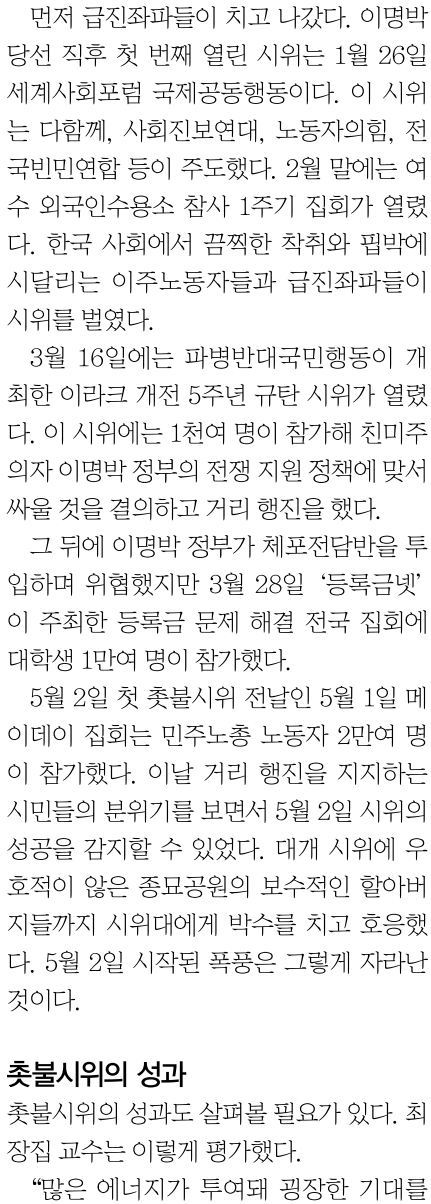
그러나 주요 진보 단체들이 주창하는 것이 이명박의 공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져야 쌓여 갔다. 인수위 시절의 ‘어러블’, ‘고소영·강부자’ 내각에 대한 반감으로

대중은 싸움 태세를 갖추어 갔다. **당시 대중의 정서는 기존 주요 개혁주의 사회운동 단체 지도자보다 원목에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주요 사회운동 단체들은 단체로서 뒤늦게 운동에 참가했고 중요한 논쟁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뒤를 좇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 직후 다른 대응을 보여 준 그림도 있다. 이명박 당선이 결코 운동의 후퇴가 아니며 저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위가 이어졌다. **조직된 저항들이 이후 저항의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했다.**

먼저 급진좌파들이 치고 나갔다. 이명박 당선 직후 첫 번째 열린 시위는 1월 26일 세계사회포럼 국제공동행동이다. 이 시위는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전국국민연합 등이 주도했다. 2월 말에는 여수 외국인수용소 참사 1주기 집회가 열렸다. 한국 사회에서 끔찍한 착취와 핍박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과 급진좌파들이 시위를 벌였다.

3월 16일에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개최한 이라크 개전 5주년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는 1천여 명이 참가해 친미주의자 이명박 정부의 전쟁 지원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고 거리 행진을 했다.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동상황실장 박원석·한용진에게 듣는 촛불 평가와 운동의 전망



조계사 촛불 농성을 하다 수감된 5명이 지난 4월 17일 보석 석방됐다. 이 중 박원석·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동상황실장을 만나 촛불 1년 평가와 진보운동의 과제를 들어 봤다.

출소한 소감을 묻자, 한용진 실장은 병환으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육중에서 상을 맞은 것은 매우 서러운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상황실장은 신영철 사법 파동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로 5개월 넘게 구속한 사법부의 비상식성을 폭로하기 위해 1심 재판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울까도 생각했지만, 5월 1일 촛불 1주년 투쟁 전에 보석이 결정돼 투쟁에 함께하려고 나왔다 한다.

박원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현 상태를 이렇게 평가했다. “말로는 실용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실용적이지 않은 정부입니다. 이미 이명박은 촛불집회 때 일격을

트름과 노력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세력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 '견해 차이에 불과하고 단결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잘 해냈거든요. 사회운동 단체들이 서로 토닥이고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적 일기 놓은 자신감을 허무주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 생각해요.”(한용진)

“자발성은 운동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동력이지요. 그러나 비록 부족했지만, 대책회의가 집회를 기획하고 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촛불 대중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죠. 순순하게 자발성에 의한 운동이라는 평가는 운동[단체]의 역할을 너무 스스로 폄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발성’이 운동의 처음이자 끝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박원석)

“저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살아온 것이 촛불 이전이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

게 벌어져야 한다” 하고 강조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인턴제나 임금 깎자는 것도 대안이 아니고, 이명박은 아무 대안이 없어요. 청년실업 문제를 둘러싼 사자들의 저항을 조직하고 ...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실업 문제를 운동적 대응을 본격화하는 전략적 이슈로 잡아야 해요.] ... 그리스에서 올 초에 벌어진 시위나 프랑스 파업의 배경은 우리나라도 동일해요.”(박원석)

한 실장은 “경제담론 싸움을 전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 때문에 이명박 뽑았는데 이명박이 경제를 박살낼 수 있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촛불 1년 특별 강연

4월 28일(화) 저녁 7시 30분

명동 함림교회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참가비 | 4,000원 (청소년 2,000원)

주최 | 레포트21

문의 | 02) 777-273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연사 소개

김지운

한승수 총리와 맞짱 뜬 '그대네' 촛불 대학생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레포트21> 칼럼니스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

촛불은 무엇을 이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박원석 사진 이수원

한용진 사진 한수원



## 촛불 1년 특집

### ▶ 11면에서 이어짐

**한 것과 정권 퇴진 같은 운동의 단일한 목표 설정을 거부한 것 등이 그렇다.**

자발성주의는 운동 전체의 전략·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해, 적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자발성주의를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청와대와 경찰, 검찰, 사법부, 자본가와 보수 언론은 서로 견해차도 있지만, 한 계급으로 행동할 때는 대단히 의식적이고 일사불란하다.

자발성주의는 운동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자발성주의는 조직된 사회 세력과 급진좌파 들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다. 운동이 더한층 정치화하고 심화하는 데 제어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에 불순한 배후가 있고, 그래서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촛불시위를 공격했다. 5월 말에는 다함께를, 6월 말부터는 이 배후의 고리로 한국진보연대를 지목해 탄압했다.

운동의 좌경화를 바라지 않는 것은 정부와 보수 언론 같은 외부세력만이 아니다. 운동 안의 온건세력도 자발성주의와 ‘정치 배제’를 강조한다. 온건 세력들은 운동이 적당한 항의 수준에서 멈추길 바란다. 정권 퇴진 운동과 노동자 파업 같은 격렬한 투쟁으로 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2008년 5월 말 다함께를 **의식적으로** 비난한 사람들 중에는 친민주당이나 친문국현 성향이 다수 있었다(또 다른 **의식적** 집단은 경찰 ‘알바’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시 부화뇌동한 좌파들에게 유감이다). 2004년 탄핵 반대 시위 때도 온건 NGO들과 노사모 쪽은 ‘정치 배제’란 명분으로, 다함께를 연단에서 배제하거나 다함께가 발행한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등 통제하려 했다. 다함께가 탄핵에도 반대하고 노무현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발성주의의 약점으로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민주성이다. 집짓 개인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비칠 수 있다. 운동의 중요한 덕목은 단결이다.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고 행동의 목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현실에서 결정은 반드시 존재한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도 일종의 결정이고 지침이다. 자발성의 권위 뒤에 숨어서 누군가는 결정하고 지침을 내놓는다. 이런 과정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아고라가 싫어하는 것: 계몽, 간섭, 지도 … 아고라가 좋아하는 것: 연대, 지혜, 토론 …”(《대한민국상식사전 아고라》)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지도”와 “연대”·“토론”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발성과 리더십 둘 다, 동시에 필요하다.**

그 리더십은 자발성을 키우고, 그 자발성에서 배우고 대화하며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투쟁하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다. 균건하고 민주적이며 급진적인 리더십 말이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개인적으로 형성할 수 없다. 투쟁에서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은 집단적인 경험과 기억을 일반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개혁주의

둘째 약점은 개혁주의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주요한 개혁주의 단체 — 시민단체와 한국진보연대 등 — 들은 운동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 약점 때문에 운동과 저항이 더 심화하는 것을 제어하는 구실도 했다.



행진하는 촛불시위 참가자들 – 탄압 속에서도 결단력 있게 행진을 이끈 조직 좌파의 리더십이 촛불시위의 질적 도약을 도왔다

개혁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반대하고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일련의 정책을 통해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부민주의’나 ‘단일점정주의’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제 확장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다. 주요 개혁주의 단체들은 운동의 성격을 ‘광우병 쇠고기 반대’만으로 한정하려 했다. 게다가 의제 확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반대를 의미하고 결국은 정권 퇴진이라는 논리적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 단체들은 의제를 제한하려 애썼다.

개혁주의의 다른 특징은 ‘국민주의’다. 좌파적인 국민주의는 보통 ‘민중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NGO의 경우, ‘시민’이란 개념이 ‘국민주의’를 나타낸다. 물론 촛불시위는 말 그대로 ‘범국민적인 투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조차 시위에 참가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회 변혁과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도 그 투쟁의 효과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있다. 바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그렇다.

‘국민주의’는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을 그저 ‘국민’ 중 한 요소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국민주의’는 모든 구성 요소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운동에 온건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명박 퇴진 논란이 벌어졌을 때,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는 ‘시위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이명박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주의의 중요한 한계는 저항과 투쟁이 급격하고 중요한 고비를 맞았을 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기보다 적절한 시점에서 정리·타협하는 게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

이다. 그래서 6월 10일 이후 주요 개혁주의 단체들이, 이명박 퇴진을 앞세우고 노동자 파업을 조직·확대하는 등 운동을 심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7월 초 ‘사회원로’들의 ‘국민 승리 선언’ 제안을 받아들여 촛불시위를 정리하려 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반제국주의 활동가이자 소설가인 아룬다티 로이는 개혁주의의 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알고 보면 압력솥의 백백대는 경보음이 담당하는 기능과 흡사하다. … 정치적 분노를 위무하고 승화시켜 그러한 분노가 결정적 국면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개혁주의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일상적 시기에는 개혁주의 단체 지도자들뿐 아니라, 대중의 의식도 개혁주의에 이끌린다는 것이다.** 이것의 뿌리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착취와 소외, 억압은 대중의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에 총체적으로 맞서는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파편화하고 분절된 개혁주의에 이끌리게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기도 하지만, 착취는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고 경쟁에 내몬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어 노동에서 소외를 느끼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체제의 틀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에 이끌리게 된다. 심지어 혁명적 시기에도 그렇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는 8월에 가서야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에서 다수파가 될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개혁주의 세력이었던 사회혁명당이나 개혁파 혁명 사이를 오락가락한 중간주의 멘셰비키가 다수파였다.

대중이 개혁주의에 끌리는 또 다른 요소는 개혁주의 지도부들이 투쟁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두 가지 요소, 즉 대중의 개혁주의적 의식과 개혁주의 지도부의 투쟁 지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고전적 맑스주

의는 대중의 의식이 자신의 행동과 투쟁을 통해 변한다고 여긴다. **이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전선’이다.** 공동전선은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운동을 확대하려 노력하면서 이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가장 적극적인 투쟁 부위가 돼 변혁적 대안의 올바름을 대중에게 입증하는 전략·전술이다. 촛불시위에서 대다수 극좌파가 자인한 ‘무능’은, 바로 이 공동전선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었다.

개혁주의 문제의 또 다른 쟁점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1백10여 년 전에 던진,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질문의 유효성이다.

운동 그 자체만을 만능으로 여긴다면, 로자 룩셈부르크의 질문은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저 현실의 투쟁이 중요할 뿐 거대한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점과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현실 투쟁의 전략·전술을 좌우한다.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게다가 경제 위기 때문에 개혁의 여지가 더 줄어든 지금, 근본적 변혁 원칙을 현실에 적용해 투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 조직 노동계급

셋째 약점은 조직 노동계급의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6월 10일 대규모 시위가 제공한 매우 중요한 기회 — 이명박의 후퇴, 운동의 자신감 증대와 비옥한 정치적 토양 — 를 조직 노동계급은 살리지 못했다.

이는 운동 전체에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집단적 규율에 묶여 있고, 체제의 작동을 마비시킬 힘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에는 항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시 거리시위와 항쟁의 중요한 약점이었다.

촛불시위는 6월 10일 정점에 이른 후,

완만하게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1백만 거리 시위는 거리의 미조직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업적이었다. 이 업적을 이어받을 주자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조직 노동계급이었다.

게다가 6월에 화물연대 파업과 텀프·레미콘·굴삭기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져, 파업을 확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왜 기회를 놓쳤을까? 몇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의 보수성 문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촛불시위 초기 국면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시민”으로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다행히 5월 31일부터 노동조합 차원으로 조직해 대열을 갖추고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요한 타이밍에서 파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7월 2일 ‘상징적인’ 두 시간 파업에 머물렀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맹별로 하루 파업을 벌이는 ‘순환파업’을 계획했고, 이것을 이석형 위원장은 순번제로 타석에 나서는 “야구 파업”이라 불렀다. 그러나 당시는 9회까지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된 야구에 비할 상황이 아니었다. 온 힘을 다해 역공을 퍼붓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론》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대중파업을 ‘위급할 때를 대비해’ 호주머니 속에 접어 넣어 두었다가 마음먹으면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칼처럼 생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관한 것이든, 자기 작업장의 고유한 요구든 이명박에 맞서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에 노동자들의 힘을 충분히 모아 내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특성과 한계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다.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분업체제가 형성된다. 정치투쟁은 개혁주의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맡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항상 같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도 있다. 1996년 말~1997년 초 민주노총 파업이 그렇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에서 조직 노동계급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 근본적 변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나는 앞으로 벌어질 투쟁과 저항을 위해 광범한 행동을 조직하는 공동전선뿐 아니라, 근본적 변혁이라는 이상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 원칙이 아니다.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전망, 구체적 투쟁의 전략·전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촛불시위에서 벌어진 여러 논쟁에서도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도, 근본적 변혁 원칙이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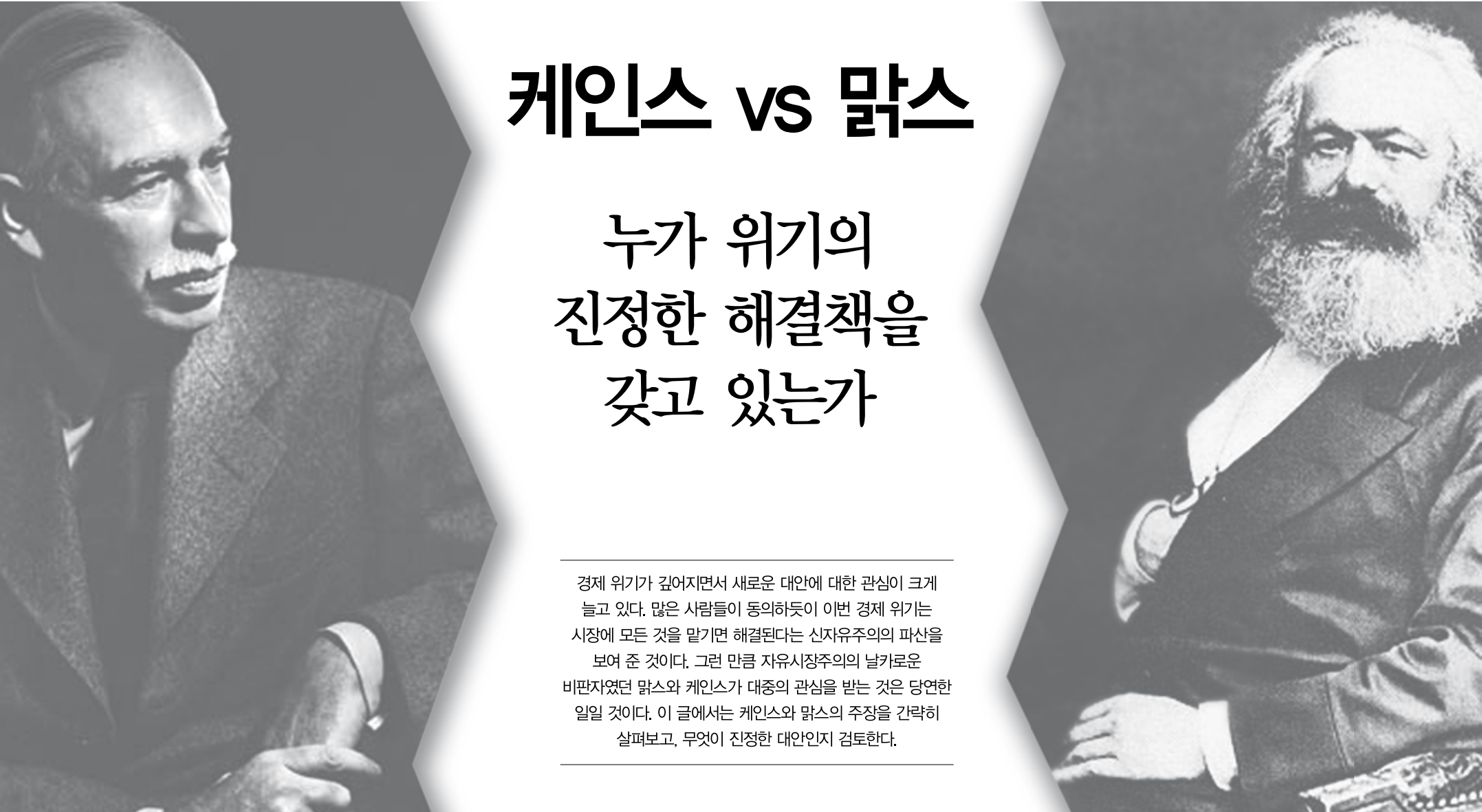
경제 위기 하의 저항과 투쟁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근본적 변혁이라는 이상과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더 첨예하고 격렬해지는 투쟁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에 도전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명박의 정책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더 나은 세계를 꿈꿨던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를 남겼다. 우리에게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쟁취해야 할 세계를 위한, 근본적 변혁을 위한 저항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



기획 연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고, 2009년 현재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가 ‘대공황 2.0’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과잉생산’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물물교환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한다. 화폐가 중간에서 매개하기는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은 자신에게 유용한 다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은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자연스레 쓰일 것이라고 본다.

물론 소득 중에는 시장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예금, 주식 또는 채권의 형태로 저축하기 때문에, 그 저축은 타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구입한다면 저축을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은행에 예금한다면 자본을 구하는 기업주에게 대출돼 사용된다.

주류 경제학은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저축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저축은 모두 투자로 전환되고 결국 생산된 상품은 모두 소비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뜻하는 바는, 정부와 노동조합이 개입해 상품 가격의 ‘자연적인’ 변화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불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실업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이 임금의 하락을 막아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는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복지를 삭감했고, 노동조합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계속 떨어져 왔다. 주류 경제학의 주장대로라면 경제는 좀더 잘 나가야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케인스, 불황은 자본가들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

케인스는 저축이 자연스레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에 반대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투자는 “부 자체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충분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면 투자에 나서지 않아 ‘과잉저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사회 전체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먹고 입기 위해 기본적인 지출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노동자·서민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해 버린다. 케인스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들은 “소비 성향이 높다.” 반면 연간 소득이 수억~수십억 원이 되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도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즉 “소비 성향이 낮다.”

케인스는 이런 논리가 사회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저축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투자는 잘 이뤄지지 않는데,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만한 투자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불안정한 데다 케인스가 “자본의 한계효율”이라고 표현한 예상 이윤율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는 저축이 늘어나는 것만큼 늘지 않는다. 그런데 투자가 줄어들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결국 저축이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편에는 실업자들이 늘고 다른 한

편에는 유휴 설비가 늘어나는 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스의 이런 주장이 뜻하는 바는 불황과 실업이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투자량이 호황과 불황을 결정짓고, 그 투자량은 “자본의 한계효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맑스의 주장과 흡사하다.

맑스, 공황의 원인은 이윤율 하락 경향

맑스는 케인스보다 70여 년 앞서 자본주의가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내용은 케인스의 것과 같지 않다. 케인스는 “자본의 한계효율”이 장기에 걸쳐 떨어진다는 개념을 제시했지만 이를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맑스는 공황의 원인을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자세히 분석했다.

맑스는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생산에 필요한 기계나 재료는 그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할 뿐이고 노동자들의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를 추가한다는 ‘노동가치론’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의 생산효율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에게 끊임없이 생산을 혁신할 것을 강요한다. 더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값싸게 상품을 공급해야만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생산의 혁신은 더 값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기계를 이용해 더 많은 원자재를 노동자가 취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자본가들의 전체 투자액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보다 기계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자본가들의 전체 투자액에 비하면 새로 창출되는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이윤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을 감지하는 자본가들은 투자를 줄이는데 이렇게 줄여든 투자는 과잉생산을 낳고 결국 공황으

로 발전하는 것이다. 고용 안정을 지키려면 대중투쟁이 필요하고 이 힘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

로 발전하는 것이다.

맑스와 케인스의 설명은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몇몇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신문들은 이번 위기가 과도한 투기 때문이라며 투기꾼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투기꾼들은 언제나 투기에 골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는 점은 이것이다. 투기꾼들은 이번 위기를 낳은 막대한 투기 자금을 어떻게 공급받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전 세계에서 생긴 ‘과잉저축’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일본·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독일 등에서 생긴 막대한 저축이 새로이 투자되지 않고 미국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돈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대출됐고, 미국인들은 그 돈으로 ‘과잉소비’를 하며 투자의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메웠던 것이다.

그러나 빚에 의존한 ‘과잉소비’는 지속될 수 없었다. 빚을 갚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거품은 꺼지게 됐던 것이다.

케인스는 주류 경제학 비판했지만 자본주의 체제 유지 원해

케인스는 주류 경제학의 날카로운 비판자였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에서 바꾸길 바라지 않았다. 케인스는 정부가 적절한 공공 투자에 나서 민간 투자의 부족분을 메운다면 공황과 실업을 극복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케인스는 “투자의 다소 포괄적인 사회화가 완전고용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급진적 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언제나 기업주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늘 부족한 대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케인스는 임금 삭감이 불황의 해결책

이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임금 삭감은 소비 성향이 높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떼어내 부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소비를 오히려 줄여 불황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케인스가 불황기에 임금 인상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 사회 전체의 소비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자본의 한계효율”에 악영향을 줘 민간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도 민간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의 공공 투자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민간 건설 자본의 투자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모순된 태도는 현실에서 당장 문제에 부딪혔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영국에서 완전고용을 위해 필요했던 일자리 3백만 개를 창출하려면 정부 지출을 약 56퍼센트 늘릴 필요가 있었다.

결국 제2차세계대전의 전시경제에서야 이런 대규모 정부 투자가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시에 정부 지출을 실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린다면 기업주들은 자신의 이윤과 재산이 잠식되고 그들의 경제 지배를 위협한다고 느낄 것이다.

기업주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식으로 정부 정책을 뒤흔들고 심지어는 개혁 조처들을 실행하려는 정부를 전복하려 할 것이다. 케인스의 기대와 달리 경제 불황기에 완전고용의 달성은 기업주들의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해고 위협에 직면한 공장을 점거하고 싸움으로써 지배자들을 강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이다. 또한 이 힘은 개혁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기업주들과의 ‘불안한 동거’를 끝내고,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맑스적 위기 해결책이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국제

# 파키스탄은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

제프 브라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파키스탄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를 이간질한 영국 제국의 ‘분리 지배’ 정책 때문에 1947년에 파키스탄이 탄생했다. 파키스탄의 건국은 자신만의 국가를 갖고 싶어 하던 인도 북부에 기반한 극소수 지주와 지식인 무슬림 중간계급의 이해관계와 부합했다. 통일된 상태였다면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인도아대륙의 분할은 강대국들, 특히 1950년대 초부터 파키스탄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에게 커다란 이익이었다.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원조, 그중에서도 특히 군사원조를 통한 동맹 관계다. 그 결과 파키스탄에서 군대가 유력한 집단이 됐다. 지금까지 군부독재 정권이 네 번 집권했고, 이는 파키스탄 역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간이다. 군대는 힘으로 특권을 지켰고 역사의 분수령마다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번 위기(해임된 대법원장 초드리의 복직을 요구한 대중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 국무부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겠지만, 군부는 이번 위기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물론 파키스탄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1970년대 민족주의자인 총리 줄 파카르 부토 — 베나지르 부토의 아버지이자 부토 가문의 수장 — 는 핵무기 독자 보유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 계획은 당시 미국 대통령 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됐다. 오늘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아홉 나라 중 하나다.

파키스탄 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군사 기구의 힘이 막강하지만 “과연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국 25년 만에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당시 이름은 동파키스탄)와 파비린내나는 내전을 치렀고, 1971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했다. 파키스탄에는 네 개 주(州)가 남았는데, 그 가운데 북서변경주(NWFP), 발로치스탄 주, 신드 주에는 분리 독립 운동이 존재한다.

## 무능한 파키스탄 정부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서변경주와 국경지대의 연방직할부족지역(FATA)에서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했다. 2002년부터 미군은 이 지역에서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온 탈레반을 제거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색출·사살한다는 명목으로 무인폭격기를 동원해 이 지역을 폭격했다.

이 때문에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사람들은 무장 저항세력에 호감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단지 미군의 군사 공격 때문에 저항세력에 대한 지지가 느는 것은 아니었다. 파키스탄 군대도 민간인을 학살했고, 무능한 파키스탄 정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제·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사람들은 카라치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동맹인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압력에 대응해, 또 미국의 군사 지원이 인도를 상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파키스탄 군대는 최근 북서변경주와 연방직할부족지역에서 대테러 군사 작전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이 지역 주민과 심하게 충돌했고 파키스탄 군대 일부가 투항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사실, 상당수의 파키스탄 군인은 이 군사 작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이런 군사 작전은 2008년 8월에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차로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 스와트 공격에서 절정에 달했다. 파키스탄인민당(PPP)과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의 지지를 받은 이 공격으로 몇 주 만에 난민 40만 명이 생겨났다. 난민들은 살 곳을 찾아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로 피난했지만 카라치 시장은 난민들이 탈레반을 유입한다며 그들을 공격했다. 최근 카라치에서 종족 간 분쟁이 많이 벌어졌다는 점을 볼 때, 이 공격으로 난민 대학살이 초래된 것은 당연하다. 수십 명이 살해됐고, 1천5백만 인구의 도시가 이를 동안 폐쇄됐다.

군사 전략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자르다리는 반란세력과 휴전을 합의하고 스와트 지역의 1백60만 주민들에 대한 통치권을 탈레반이 주도하는 무라(이슬람의 학자·교사·율법학자들에게 넘겨 줬)였다. 지금 스와트 지역에서 샤리아 율법이 적용되면서 무라들이 사법부를 운영한다. 소녀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여성들은 장보려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교외지역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지도 못

한다. 빈민들은 이런 푸대접을 받으려고 미국과 파키스탄 군대에 맞선 투쟁에서 탈레반의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빈민들은 이제 탈레반에 분노한다.

## “아프팩” 전쟁

미국과 파키스탄 합동 군사작전의 결과 오바마 정부 관리들이 편이상 “아프팩(AfPak)” 전쟁으로 부르는 전쟁이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분쟁은 서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데이비드 밀리밴드(영국 외교부장관)가 워싱턴 방문 후에 말했듯이, 파키스탄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이 안정될 리가 없다. 양국 국경은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총독이 제멋대로 그은 것이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독립된 파슈툰 국가를 세우고 싶어 하는 파슈툰족들이나, 강제로 국경조약에 서명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이 국경선에 반대한다.

오바마는 이미 병력 수천 명을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배치했고, 이 수를 1만 7천 명으로 늘리려 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동맹들에게 추가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바마 정부의 말하는 방식이 조지 부시 때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바뀐 것보다 유지되는 것이 더 많다. 미국이 실제로 비군사적 원조를 세 곱절로 늘리더라도 대중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백악관이 파슈툰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안을 검토할 정도로 미국의 지위는 취약하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크지만 가장 가난하고 인구도 1천만 명으로 가장 적은 발로치스탄 주는 영국령 인도에 공식적으로는 속한 적이 없었다. 독립을 낙관하던 1947년에 파키스탄 군대가 이 지역을 침략해서 파키스탄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때부터 항쟁이 계속 일어났고 잔혹하게 진압됐다. 1970년대에는 시위대 수

만 명을 진압하려고 파키스탄 군대 8만 명이 투입됐다. 그래도 저항은 계속됐다. 2005년에는 수이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 공급망을 공격해 카라치 주민들이 솟으로 요리해야 했다. 이 사건은 가스전 개발로 발로치스탄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전혀 없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이 와중에 발로치스탄 주민 수백 명이 정보기관과 접촉한 후 ‘실종’됐다.

파키스탄은 1947년부터 다섯 번째 주(州)인 카슈미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도와 두 번 전쟁을 치렀고 모두 패배했다. 카슈미르는 여전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은 카슈미르의 인도 점령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이슬람주의 조직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댔다. 카슈미르 전쟁은 인도-파키스탄 간 대리전이었다.

1988년에 오늘날 통제선으로 불리는 인도 관리 지역 휴전선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카슈미르 지역에서 폭력이 증가했다. 분쟁 때문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힌두교도와 무슬림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됐다. 파키스탄 국가는 카슈미르의 자결권을 부정한다. 한편 카슈미르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지배적 세력이 됐고 많은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자헤딘(전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원조를 받는 무슬림 단체 가운데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가 가장 유명인데, 아마 이들이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를 저질렀을 것이고, 3월 스리랑가 크리켓 팀에 대한 테러도 심중팔구 이들의 책임일 것이다.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카슈미르 개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이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울 무자헤딘을 훈련하며 시작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청년 실업가이던 오사마 빈 라덴이 양쪽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 이 전쟁으로 난민 1백만 명이 파키스탄의 도시로 들어와 대규모 빈민촌을 형성하게 됐고, 갈라슈니코프(러시아의 자동 소총 AK-47의 통칭)와 헤로인이 대거 유입됐다.

[3월에] 초드리를 복직케 한 운동은 파키스탄이 나아갈 길을 보여 줬다. 경찰 폭력이나 체포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변호사와 활동가 들뿐 아니라, 2007년에 초드리가 복직을 요구하며 싸울 때 이를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7년 7월 초드리가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1백만 명 이상의 환영 인파가 라호르에서 이슬라마바드에 이르는 거리를 가득 메웠다.

2006년 3월에 카라치에서 열린 세계 사회포럼에도 3만 명이 참가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줬고 반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청중이 있음을 보여 줬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최근 역사에서 파키스탄 좌파가 약해졌지만, 1968년에 파키스탄의 첫 군부 독재자 아이유 칸을 몰아낸 노동자와 학생 투쟁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파키스탄 지배자들의 사분오열을 본다면, 그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지면 제약상 축약 게재했으므로 전문은 [www.left21.com](http://www.left21.com)을 보시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9년 4월호  
번역 차승일



대법원장 초드리의 복직을 요구하는 대장정

사진 출처 파키스탄 노동당



## 국제

타이 민주화 투쟁

# 붉은 셔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자이 자일스 옹파콘 타이 좌파 활동가

타이 군대가 방콕의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타이 역사에서 군대는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네 번 발포했다. 매번 발포의 목적은 똑같았다. 지난 70년 동안 타이를 통치해 온 보수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최근 타이 상황을 보면, 현재 혼란이 단지 티셔츠 색깔과 지지 정당이 다른, 실제로는 거울 이미지처럼 서로 닮은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위기는 2005년 말부터 타이에서 빈민과 엘리트 간 계급투쟁이 격화한 결과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형태의 계급투쟁은 아니다. 타이 좌파의 공백 때문에 탁신 시나왓 같은 부유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빈민의 지도자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타이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와 농촌의 빈민이 ‘붉은 셔츠’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되찾고 싶어 한다.

그들은 원래 탁신이 이끈 ‘타이 락 타이’ 정부의 수동적 지지자들이었다. 지금 그들은 스스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시민 운동을 건설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동안 당연히 돼 온 군 장성과 왕실의 ‘조용한 독재’의 종식을 뜻한다.

‘조용한 독재’에서 군 장성, 왕의 보좌관, 보수적 엘리트 들은 초헌법적 존재로 군림해 왔다. 그들은 국왕모독죄 등의 수단을 사용해 저항세력을 억눌렀다. 그들은 2006년부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연거푸 탁신 정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노란 셔츠’ 폭도들의 거리 난동을 지원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민주당’ 정부도 군부의 힘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붉은 셔츠가 탁신을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탁신 정부는 최초의 국민의료 제도를 포함해 많은 현대적 빈민 구제책을 도입

했다. 그러나 붉은 셔츠는 탁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탁신과 붉은 셔츠의 관계는 변증법적이다. 탁신은 붉은 셔츠의 투쟁을 고무하고 자신감을 심어 줬다. 그러나 붉은 셔츠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한 조직들로 구성돼 있고, 그 중 일부는 국왕에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탁신의 지도가 진보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 간 붉은 셔츠의 행동에서 자발적 측면마저 나타났고, 붉은 셔츠의 탁신계 정치인들은 이를 따라잡기에 급급했다.

또, 붉은 셔츠 운동의 공화주의적 성격이 강화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좌파 지향적 타이인은 탁신 지지자가 아니다. 우리는 탁신의 인권 유린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붉은 셔츠 운동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좌파 경향을 구성하려 한다.

### 노란 셔츠는 유권자의 투표권 제약하려 해

노란 셔츠는 보수적 왕당파 집단이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파시스트적 특징을 보인다. 노란 셔츠의 ‘경호원’ 들은 화기(火器)를 사용한다. 그들은 2006년에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고, 지난해 정부 청사를 약탈하고 국제공항을 봉쇄했다. 군부가 그들의 뒤를 봐 주고 있다. 군대는 노란 셔츠에 발포한 적이 없다. 영국 사립고등학교와 옥스퍼드를 졸업한 민주당 총리도 노란 셔츠를 가만 놔 뒀고, 노란 셔츠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노란 셔츠의 목적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약해 보수적 엘리트들이 ‘옛날 옛적 방식’으로 타이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시민권 향상에 위협을 느낀 노란 셔츠는 “신질서” 독재를 대안으로 내세우는데, 이 체제에서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만 국회의원과 공직 대부분은 선거와 상관없이 임명될 것이다. 타이 주류 언론, 대다수 중간계급 학자, 심지어 NGO 지도자들도 이것을 지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타이 NGO들은 노란 셔

츠를 옹호하면서 노란 셔츠와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에는 침묵해 왔다. NGO들은 원래 의도는 좋았지만 정치의 부재로 혼란을 겪으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타이 ‘왕실’을 말할 때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타이 왕의 권력은 언제나 미약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왕실의 권위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이른바 ‘안정세력’으로 꼽히는 왕실은 사실 엘리트들의 이익을 안정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굴지의 부자인 왕은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왕비는 놀라우리만치 반동적이다. 그러나 타이 엘리트의 실세는 언제나 군부와 고위 관료들이었다.

현재 타이의 소요 사태를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 단순한 기물 파손과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노란 셔츠와 군부야말로 진짜 폭도다.

타이의 역사를 보면 왜 붉은 셔츠에 참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군부의 군화발을 참아야 했고, 거둬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주류 언론과 학계의 멸시를 받았다.

붉은 셔츠가 계속 저항한다면 군대 안에서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타이 시민들은 매우 정치화했다. 빈민 가정 출신인 사병들은 붉은 셔츠를 지지한다.

지금 판돈이 매우 크다. 아무도 만족시키 못할 봉합은 오래지 않아 깨질 가능성이 크다. 엘리트들은 붉은 셔츠가 공공연한 공화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탁신과 타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건, 타이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붉은 셔츠는 군부와 왕실의 정치 개입에 신물난 수많은 타이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 비정치적인 입헌군주정의 도입을 바란다. 이번 투쟁에서 붉은 셔츠가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기를 바란다.

번역 김용욱 기자



4월 9일 방콕 시내를 점거한 후 환호하는 붉은 셔츠 시위대

사진 출처 flickr.com

## 소말리아 — 진정한 ‘해적’은 워싱턴에 있다

미군 해군이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또 한 번 함자량을 했다. 이번에는 특전사가 동원돼 미국 상선의 함장을 인질로 잡고 있던 소말리아 해적 3명을 살해했다.

소말리아 부족장들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미국 상선을 납치한 해적들과 협상중이었다.

지금 소말리아 앞바다에는 이 해적들과 싸우겠다고 파견된 값비싼 군함들이 득실대고 있다. 그러나 해적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1990년대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많은 나라가 소말리아 앞바다에 독성 폐기물을 버렸다. 2004년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 폐기물들이 소말리아 해변으로 쓸려갔다.

그 결과 소말리아인 수천 명이 중독됐다. 그러나 군함을 파병한 이른바 ‘국제사회’는 정화비용을 대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소말리아 어부들은 비공식

적 해안경비대를 꾸려 불법적 폐기물 투기를 막으려 했다. 나중에 그들은 폐기물을 버렸다고 의심되는 선박들을 억류했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트롤 어선들을 내쫓았다.

지금 소말리아를 통치하는 천서방 정부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함자량하려고 더 많은 군함을 보내고, 이제는 소말리아 영토에서 ‘작전’(실제로는 침략)을 벌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 고장난 자본주의 ②

##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칼 맑스는 오늘날 ‘경기순환’이라 불리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 중 하나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맑스는 그런 경기순환들의 반복을 관통하는 장기적 경향들을 지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율 하락 경향”이었다. 맑스는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총이윤은 그들이 착취하는 노동자들의 숫자와 착취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자본가가 경쟁 자본가보다 노동자한테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면 기계와 원재료 축적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만약 이윤의 양이 정해진 상황에서 투자량이 증가한다면, 투자에 대한 수익, 즉 “이윤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이윤율이 50퍼센트라면, 자본가들은 2년 뒤 기업 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윤율이 10퍼센트로 줄면, 10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윤율 저하는 자본주의 성장에 제한을 가한다.

이윤율 회복에는 두 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다. 하나는 노동자 착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노동자들이 체제가 생산한 상품의 일정량을 소비해 줘야 한다.

이윤율 회복의 또 다른 경로는 위기 그 자체다. 예컨대, 만약 기계가 팔리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은 그 기계를 원래 가치보다 훨씬 싼값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기업이 파산하면 경쟁 자본가들이 그 기업을 헐값에 사들일 것이고, 그들의 이윤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 현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

만약 경제 위기로 체제 전반에서 자본 파괴가 일어나고 실업률이 급등해 노동자 조직이 약해진다면, 살아남은 자본가들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1890년대~1920년대 동안 이윤율이 40퍼센트나 하락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기가 즉각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신 생산적 투자가 줄었고 임금도 줄었다.

이 때문에 체제의 잠재적 생산능력과 자본가와 노동자의 낮은 수요 사이에서 격차가 생겼다.

비생산적 지출의 증가가 이 격차를 메웠다. 예컨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부자들의 사치품 소비가 늘었고, 금융 팽창으로 개인 부채가 증가했다.

1920년대 말 이 거품이 붕괴해 감춰진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각 나라들의 초기 대책은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딜’은 경제를 잠시 되살렸지만 1937년에 성장률이 다시 주저앉았다.

결국 제2차세계대전을 벌이기 위한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과 전쟁이 초래한 파괴로 체제의 이윤율이 회복됐다.

전쟁 후에도, 주요 나라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950년대~1960년대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긴 호황기였다.

엄청난 자원을 무기 생산과 다른 ‘낭비’ 부문에 쏟아 부은 덕분에 생산적 투자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윤율은 떨어졌지만 다른 때보다 천천히 떨어졌다.

197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불황은 1930년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또 다른 장기 경향을 봐야 한다. 자본주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즉 기업들이 이윤을 재투자하고 경쟁 기업을 사들이면서 개별 기업의 규모도 커진다.

1980년대 초반에 국가들은 이제 너무 비대해진 대기업들의 파산을 부담스러워 하게 됐다. 대기업이 파산하면 경기 후퇴가 장기 불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들은 이를 막으려고, 가령 대기업을 구제하는 식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파산을 막았지만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낮은 수준이었다. 자본가와 정부 들은 생산 외의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했다. 그들은 특히 금융 같은 투기적 부문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것은 세 가지 효과를 낳았다. 먼저, 신용 확장으로 노동자, 특히 미국과 영국의 노동자가 제한적 임금상승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생산적 투자로 향했을 이윤들이 투기 부문으로 흘러나간 덕분에 이윤율 하락 경향이 더 지연됐다.

셋째, 금융 확장으로 특정 시장, 즉 1990년대에는 ‘닷컴’ 기업들의 주식시장, 최근에는 부동산·파생상품·파생상품 시장에서 거품이 형성됐고, 그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윤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이 환상은 깨졌다.

현재 문제는 단순한 ‘신용 경색’이나 ‘은행 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금융의 성장 등으로 잠시 연기됐을 뿐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불황이 지속되리란 법은 없다. 지배계급은 어쩌면 또 다른 거품을 만들거나 체제가 앞으로 몇년 동안 그럭저럭 움직일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해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조지프 추나라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번역 김용욱 기자



장하준 교수 〈프레스미안〉인터뷰를 읽고

## 통찰력 있는 견해, 그러나 비관적 전망

〈레프트21〉 3호의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기사에는 최근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견해를 다루지 않았는데, 때마침 이 문제에 관한 인터뷰(〈프레스미안〉 4월 8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장하준은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크면 더 컸지 덜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부론 “낙관론”에 대해서도 “지금 2막이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일축했다.

또, G20 정상회의가 대성공이었다는 주류 언론들을 비롯기라도 하듯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파생상품 규제를 포함하지 않은 대응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적자재정하면서 후진국 보고는 이자를 올리고 흑자재정하라고 요구한다”며 강대국들의 위선을 꼬집기도 했다.

그 밖에, 현재 국가 지도자(오바마를 포함해) 가운데 “근본적 개혁”을 주도할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고, 중국의 성장력을 과장하는 논자들과 달리 “중국은 양극화가 심각해서 세계경제 변화의 주도권을 쥔 여력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런 통찰력 있는 현실 인식과 시원스런 폭로를 보고 있으면, 얼마 전 연세대에서 열린 장하준 교수 강연회에 왜 무려 5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대타협’ 프로젝트

그러나 이 인터뷰에서는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비관적 전망이 그러하다. 자신의 주장이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털어놓는 데서 그의 통찰은 갈 길을 잃어버린다. 최근에 출판된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의 맺음말에서 장하준은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고 낙관적 전망을 외친 바 있다.

아마도, 세계 경제 위기 심화에 대한 각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권력자들의 대처 방식을 보고 심정이 동요한 듯하다. 그들도 장하준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을 말하지만, 장하준의 구상과 달리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투기꾼 집 로저스의 말처럼)만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텨이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게서 그가 느꼈을 환멸감도 심정 동요에 한몫 했을 성싶

다. 세계 자본주의가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인 탓에 기업주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양보할 여지는 더욱 줄었다. 따라서 재벌의 양보를 전제로 한 장하준의 ‘대타협’ 프로젝트는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보를 얻어내려면 체제 유지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가 노동자들과 억압받는 대중의 자주적 행동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이런 아래부터의 관점이 있었다면 지난 달 프랑스 총파업이나 G20 항의시위를 보고 비관적 전망을 떨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5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하준 교수 강연회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비관적 전망을 지닐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졸초임 삭감을 수반하는 ‘노사정 타협안’에 대한 그의 비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권력자들에 맞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떠올려 본다.

이종길

### 3호를 읽고

#### ‘진보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기사를 읽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반드시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이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투쟁으로 쟁취해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 및 폐기처분해야 한다.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행되면 자본은 이것을 핑계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며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이 부실한 경우, 체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유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체제 안전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

일자리 유지는 체제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 정책연구원이란면 체제의 안전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노동자 계급은 체제의 안전에 도전하여 새로운 체제로 대체할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 강도 강화 및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증가”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므로 차라리 “해고금지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

한지원은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자본의 공세일 뿐 그것에 밀려 주장을 철회하자는 것은 너무도 수세적 태도다. 노동자 계급이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한다면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제할 것이다.

해고금지특별법은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등 자본가의 대의 기구에 가해지는 엄청난 운동의 압력이 있기 전에는 힘든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런 운동을 건설해 놓고 왜 우리의 요구가 후퇴해야 한단 말인가?

이창배

#### ‘민주노총 임성규 지도부의 과제’ 기사를 읽고

기사 자체는 매우 훌륭하게 쓴 기사인 것 같다. 비슷한 주

제의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사의 균형 잡힌 관점과 풍부한 사례를 보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다소 지엽적이지만 조금은 의아했던 부분은 KBS노조를 국민적 왕따에 비유했는데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KBS노조가 전술상의 오류로 인해 낙하산 사장을 받아들이거나 중요한 시점에 언론노조에서 탈퇴하기는 했지만,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에 훨씬 가까운 좌파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고 지난겨울 언론노조 파업 집회에 참가해 환영을 받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적 왕따로는 이명박이 제격일 텐데 KBS노조와 이명박을 동급으로 놓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병준

#### ‘정부의 낙태권 권리 제한 시도’ 기사를 읽고

최근 보건복지부의 낙태 규제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는 최미진 기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번 시도가 최 기자의 묘사처럼 갑작스런 “역주행”은 아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공청회 때 검토한 개정안에 들어 있던 것이다.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서구의 많은 나라들처럼 여성의 낙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 완화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개정을 진지하게 시도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공청회 때 나온 낙태 허용 기준 완화안은 보수 언론과 종교계 등의 반발이 있을 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라는 최 기자의 주장은 옳다. 안타까운 것은, 여성단체들 중에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같이 공청회를 준비했던 ‘여성계’는 “의학발전에 따른 기준 강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입장이라고 MBC가 보도했는데, 이런 이유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을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으려는 데서 보듯 이번 개정은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필요에 따른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 내에서 커져야 한다.

정진희

## 〈레프트21〉 현대차 판매 경험

〈레프트21〉 창간호를 가지고 2주 동안 현대중공업 무교섭 반대 기자회견, 현대차 지부 정치위원회의 진보정당 토론회, 공무본(경제위기 전가에 반대하는 지역조직) 토론회, 현대중공업 주점 4곳에 참가해 12부를 판매했다. 신문에 대한 반응이 좋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레프트21〉 신문 2호를 현대차 옛 정문에서 처음으로 공개 판매했다. 3월 30일 이른 아침에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판매했는데 7부나 팔렸고, 다음 날에는 신문 1면과 나머지 지면을 연결하면서 선동했더니 30분 만에 6부가 팔렸다.

그날 오후에는 현대차 사내 4공장사업부 대의원들에게 이명박에 맞서 싸울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 내용을 소개하고 대화를 나눴다. 대의원 대다수는 후보단일화가 되길 희망했다. 정기구독할 것을 권유하자 대의원 총무는 월례회의에서 안건(〈레프트21〉 정기구독 신청)으로 제기했고, 4공장 사업부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1년 동안 2부를 구독하기로 했다.

### 최일봉 동지의 논평에 답하며

## 금산분리 완화 반대가 전술로선 유용하다

〈레프트21〉 2호의 내 기고 글에 대한 최일봉 동지의 비판적 논평(지난 호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에 우선 감사한다.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논평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석과 대안 논쟁에서 자본의 특정 편재 방식 문제는 부차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나 역시 글 서두에서 이미 한국의 재벌(나는 여기서 소유지분을 문제삼는 개혁주의적 용어법이 아니라 재벌을 대자본에 대한 대중적 호칭으로 여겨 사용했다), 즉 대자본들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업들을 소유·경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예상 역시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최 동지의 비판 중 내가 총체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하지 않고 말단지엽적 문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 최 동지와 이론적 출발점을 달리해서가 아니라 내 글이 금산분리 쟁점에 한정해 논지를 전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 의견을 부연하자면, 한국의 대자본들은 산업 이윤을 하락 탓에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을 통한 투기적 이익 추구에 몰두해 왔다. 이것이 IMF 이후 10년간 금산분리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장기 불황에도 한국 경제가 금융 호황을 겪은 이유다. 그러나 이 불안정한 호황은 2002~2003년 카드대란, 지난해 펀드 폭락, 최근 부동산 거품 폭락 위기 등으로 근본적 취약성 역시 거듭 드러내 왔다.

따라서 “경제 공황기에 거대한 금산복합체는 특정 기업의 부실을 경제 전체로 확산시킬 위험성을 키운다”는 내 지적이 맑스주의적 경제 분석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그 위험성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편, 최 동지는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

〈레프트21〉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1공장 대의원들은 울산북구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 내용에 대해 열띤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4월 18일에는 토요일 현대차 ‘서영호·양봉수 열사회’에서 열사묘를 재정비하려고 양산 솔밭산에 갔다. 거기서 여러 노조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신문을 소개했더니, 두산중공업 ‘배달호열사회’ 노조활동가는 같이 활동하는 동지도 날카로운 좌파가 되려면 〈레프트21〉을 봐야 한다며 2부를 샀다.

그리고 다른 활동가들도 신문을 사서, 총 7부를 판매했다. 열사묘도 재정비하고 날씨도 좋아서 맑도 흘렸고, 두산중공업 동지와 대화도 좋았고, 신문도 잘 팔려 너무나무 힘이 나는 하루였다.

〈레프트21〉이라는 좌파 신문을 무기로 공장 안팎에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정동석 현대차 노조 조합원

하는 개혁주의자들 중 금융자본을 죄악시하는 쪽과 단순히 자본의 특정 편재 방식에 집착하는 쪽을 구분하지 않는 듯하다. 예를 들어, 장하준 교수의 경우, “금융과 산업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비효율을 걱정”한다. 산업자본인 재벌이 ‘국부의 원천인 제조업’을 등한시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교수에 의존하는 편인) 심상정 전 의원의 문제의식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나는 한국 자본주의를 국가가 주로 은행을 통해 사적 자본을 보호·육성해 왔던 시기에서 사적 자본이 점차 독립해 온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이행해 온 과정의 한 에피소드일 뿐이다.(이 과정이 자본 자체의 판단으로 역전될지 아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런 점에서 ‘금산분리 고수가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주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유용하다. 결국, 근본에선 ‘어떤’ 자본주의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전술적으로 중요한 슬로건은 ‘은행 국유화를 통한 공공적 운영 요구’ 일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우리가 은행 국유화를 요구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에 ‘전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나는 그것이 노동계급에게 부차적인 쟁점에 불과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금산분리 반대가 전술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은행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은행의 본적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이 모순되진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재벌과 경제적 부정의에 대한 반감, 친재벌 악법들을 강화하려는 MB정권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김문성



## 신해철 씨의 로켓 발사 경축 글을 보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냉전 해체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가해진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의 결과다. 따라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해, 그리고 적법한 국제 절차에 의해 로켓을 발사한 것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할 일”(가수 신해철)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민족의 또 다른 일부에게는 재앙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이번 로켓 발사에 허비한 수천억 원을 인민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했더라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의 일부가 경제 위기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며 주린 배를 움켜쥐고 굶어 죽거나 죽음을 불사한 국경 탈출을 벌이는 참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 역시 남한이나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적대적인 두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럼에도 ‘한 쪽에서는 인민들이 죽어 가는데 수천억 원짜리 로켓이나 발사한다’며 남한 지배계급이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것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 우리도 핵과 미사일로 무장?

남한 지배계급은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그들의 온갖 추한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밀 빠진 부실기업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절망의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 지배계급과 북한 지배계급은 맑스가 표현했듯 싸우는 “형제”들일 뿐이다.

신해철 씨는 자신의 글 말미에 “배달민족 4천3백 년 역사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했다.

그의 앞선 발언이 물고 울 파장을 염두에 둔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남한을 북한과 같은 약소국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길은 없으나 남한의 핵무장 혹은 장거리 미사일 보유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 심화와 더불어 이 지역의 정세는 한층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남한은 약소국이 아니다. 남한과 일본의 지배계급은 북한의 로켓 발사실험을 핑계삼아 무장력을 강화하거나 PSI 등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국 동북아의 긴장은 증대할 것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염원하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너도나도 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각국의 지배계급에게서 정치적·조직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신해철 씨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비록 제국주의를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말이다.

김기철

## 종합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저항

#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건들지 마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덤프연대는 2004년 9월 80명으로 출범한 이후 2005년 ‘도로법 개정’을 쟁취한 파업 승리를 발판으로 현재는 1만5천 명 조합원을 조직한 전국조직으로 성장했다.

2007년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노동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로 통합해 단결력

을 높이게 됐다. 2005년 파업 투쟁 승리 후 덤프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이뤘다는 점도 기뻐지만, 허울좋은 ‘개인사업주’가 아닌 몇몇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뿌듯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아 하루 12~15시간을 일하면서 ‘개인사업주’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과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 결

과 빠빠지게 일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 5월 말부터 총파업

노동조합을 건설한 후에도 회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부정하거나, 배차권한을 악용해 노동조합 탈퇴

를 종용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성장한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단결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설협회와 레미콘 연합회 등과 경총은 건설기계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이들이 속한 노조는 노조법 위반이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건설기계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필증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누렸던 조그만 혜택마저도 빼앗으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들의 노조를 없애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건설노조는 5월 말부터 노조 탄압 중단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거센만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단호함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게다가 비슷한 처지로 공격받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을 벌인다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다.

박재순 전국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4월 11일 건설·운수 노동자들의 노조 탄압 규탄 집회

사진 이윤선

#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따르며 크게 아부하는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얻은 신경민 앵커가 지난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MB 씨의 MBC 장악 시도’가 결국 방송사 간판 앵커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경민 앵커 교체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를 포함한 <PD수첩>을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탄압하고, 결혼식을 앞둔 김보슬 PD를 연행하는 등 정권의 언론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MBC 광고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에도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신경민 앵커 교체를 주도한 보도국장 전영배는 박연차가 이명박 측근인

천신일에게 수십억 원을 건넸다는 뉴스를 빼라고 방송 직전에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MBC 노동자들은 정권에 굴복한 사측의 공격에 잘 대응했다.

아쉽게도 신경민 앵커 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이는 당사자인 신 앵커가 사측의 방침을 수용했기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압력이 충분치 못해서가 아니었다.

사측이 신경민 앵커와 김미화 씨를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MBC 기자와 PD 들은 즉시 파업(제작거부)과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카메라 기자와 일부 앵커까지 가세한 이번 파업의 효과는 상당했다. 언론악법 저지 파업 때보다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신경민 앵커가 사측의 교체 방침을

수용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다. 불신임 투표에서 96명 중 93명의 기자들이 전영배 사퇴와 엄기영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결국 MBC 사측은 김미화 씨를 교체하지 못했고, 보도국장 전영배를 사퇴시켜야 했다. 8일이나 지속된 파업에 밀려 엄기영은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MBC 기자들은 “공정보도를 위협하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과 도발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보도본부 차장-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이명박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선 투쟁 속에서 MBC 노동자들은 단련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언론악법 저지 투쟁에서 선두에 섰던 MBC 노동자들은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사측에 맞선 투쟁에서도 잘 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대로 공격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 당장 6월에 언론악법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고 8월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가 있다. 지난 번 민주당의 아합과 이번 신경민 앵커 교체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노조 지도부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미디어발전위에 더는 남아 있지 말고 이 투쟁들을 조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 공무원연금 개악

#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공무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줄지어 나온다. 안정적 일자리와 연금 때문에 전 국민적 부러움을 받는 탓이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탈’에 공개하는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임금인상율은 3퍼센트 이하였고, 기본급과 함께 임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도 최근 몇 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유

일한 노후대책인 공무원연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어이 개악할 태세다. 행안부는 이번 개악안이 “역대 공무원 연금개혁 중에서 ... 가장 강도가 높”다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매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좌초해 왔다. 2000년에는 전국적인 노조(직장협의회)설립 물결과 공청회장 단상 점거로 낮은 수준의 개악에 머물렀다. 2005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까지 벌여 개악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정부는 개악 과정

에 노조를 끌어들여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안”(행정안전부)이 나왔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의 개악 의지가 강하고 노조 탄압도 심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지켜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안부 말대로 “가장 강도 높”은 개악에 공무원 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해 준 모양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더 규모가 큰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되면 전반적으로 연금 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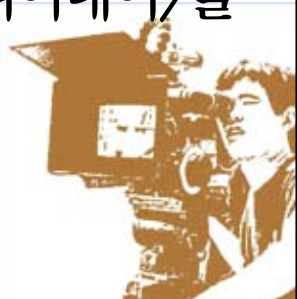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개악에 ‘사회적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2004년처럼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공노, 전교조 등은 ‘사회적 합의’를 포기하고 전공노와 함께 ‘노동자 단결’에 나서야 한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우원석 영화칼럼

##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위한 변명



인도 뭍바이 슬럼가의 청년 자말의 인생역전을 다룬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각종 영화제에서 무려 84개의 상을 싹쓸이했고 2009년 3월 기준으로 총 2억 9천만 불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영미권 장편영화치고 상대적으로 저예산 — 1천 5백만 불의 제작비 —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영화가 거둔 성공은 대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이 두툼하고 가파른 만큼 영화를 의심하는 의견들도 꽤 있다. 예컨대 영국인 감독 대니 보일이 인도 빈민가의 현실을 제대로 담았겠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 속 리얼리티와 이를 다루는 감독의 시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통속적이고 장르 영화적인 이야기 전개 때문에 영화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들도 있다. 영화의 소재인 빈곤이 볼거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뭍바이의 현실 재현 문제는 인도에 기본 적도 없는 내가 확신 있게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소설 원작자가 인도인이라는 점, 그리고 인도의 영화 비평가들 다수가 이 영화를 상당히 호평했다는 〈타임〉 기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리얼리티를 둘러싼 의심은 괜한 걱정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즉 이 영화의 진정성 문제는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

### 긴장과 모순

이와 관련해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영화는 소재와 만들새 사이에 긴장과 충돌이 있다는 점이다. 소재로 다루지는 빈민가 현실은 관객들의 보수성에 도전한다. 하지만 영화의 만들새인 장르 영화적 속성은 관객들의 보수적, 관습적 기대감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진취적인 동시에 보수적이다.

이런 모순은 감독 대니 보일에게 늘 있어왔다. 그는 줄곧 사회적 소재를 기반으로 장르 영화를 만들었다. 〈셀로우 그레이브〉(1994)는 런던 여파죽들의 추악한 아귀다툼을 스릴러 장르에 섬뚱하면서도 유쾌하게 담았다. 〈트레인스포팅〉(1996)은 MTV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향연이지만 마약 중독에 인생 낙오자인 스코틀랜드 젊은이들의 삶을 바탕에 깔았다. 또 신자유주의적 좀비의 출현이라는 농담 섞인 비평적 찬사와 함께 좀비 영화의 한 회를 그른 〈28일 후〉(2002)는 1990년대 영국을 휩쓴 광우병 공포 분위기를 간접적인 맥락으로 삼았다.

〈슬럼독 밀리어네어〉역시 마찬가지다. 찰스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질계 연상시키는 이 영화는 디킨즈의 소설처럼 통속적인 이야기와 동시대의 생생한 현실을 한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화 속 현실과 등장인물들을 대하는 대니 보일의 시선과 거리감의 균형이 디킨즈처럼 꽤나 적절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다. 영화는 어린 자말의 작은 키만큼이나 시선을 낮춰 현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서구인의 값싼 동정도 없고, 지식인의 쓸데없는 관념적 비판도 없다. 가끔 이미지와 사운드가 과시적일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깨뜨릴 정도는 아니다.

영화연출이란 결국 스크린 위 피사체를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눈높이로 얼마만큼 거리감을 유지하며 묘사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영화적 진정성이다. 그렇기에 연출의 균형감이 매우 단단한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진정성 역시 단단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 영화의 장르 영화적 달콤함이 끝내 못마땅한 하드코어 관객들에게는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의 〈시티 오브 갓〉(2002)을 권한다. 〈콘스탄트 가드너〉(2005)와 〈누런 자들의 도시〉(2008)로 최근 연달아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브라질 빈민가 아이들의 잔혹한 성장 영화인 〈시티 오브 갓〉만큼은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다 준 인상 깊은 수작이다.

우원석 영화감독



“예술이 삶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거울을 통해서다” — 루돌프 히틀러의 브레히트 초상화(부분)

막스주의와 예술

## 예술은 ‘이데올로기’인가 아니면 단순히 즐길 거리인가

희곡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술이 삶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거울을 통해서다.” 브레히트는 “모든 예술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전통적 금언을 비틀었다.

브레히트에게 그 거울은 깨진 것이었다. 깨진 거울은 이미지를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파편화된 형태로 반사하며, 그것이 보여 주는 것만큼이나 보여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브레히트의 말은 예술 작품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려는 모든 막스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미학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흔히 막스주의적 예술 비평으로 불리는 평론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좋은 예술 작품이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작품이다.”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우익이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T S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C S 루이스를 생각해 보라.

둘째, 많은 모더니즘 작품은 정치적 해석이 쉽지 않거나 정치 자체를 거부했다.

칼 맑스는 예술을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봤다. 그는 고대 그리스 희곡에서 당대의 소설까지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맑스가 브뤼셀에서 결성한 독일 노동자 모임은 매주 예술 관련 토론을 했다. 맑스는 열렬한 연극 팬이기도 했다.

또, 맑스는 젊은 시절 (형편없는) 시를 쓰고 소설을 끄적거렸다. 맑스는 자신의 저작들을 “예술적 총체”로 불렀고, 문체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다. 맑스는 예술 작품의 호소력이 단지 철학적·윤리적·정치적 수준만이 아니라, 감수성에도 달려 있다고 보았다.

맑스와 그의 동료 프리드리히 엥겔스 모두 예술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막스주의 예술 비평은 예술에 대한 맑스의 이런저런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했다. 그래서 지난 1백년이 넘게 맑스주의 예술 비평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 예술과 이데올로기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해야

문제는 이른바 막스주의 비평으로 불리는 것 중 상당수가 작품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밝혀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단순히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예술을 오직 이데올로기로만 바라보면 급세 모순에 봉착한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다. 문화는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섬이 아니다.

맑스주의 예술 비평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중 하나는 예술 작품 자체는 뒷전에 두고 그것의 역사적·사회적 맥락만 강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제대로 된 막스주의 비평이라면 예술 작품 생산의 물적 조건, 작품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할 뿐 아니라 예술을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할 만큼 혁신적인 작품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보자.

막스주의 비평가라면 조이스 작품이 등장 인물들의 생각과 고통을 매우 설득력 있게 그렸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조이스가 아일랜드인이란 점, 아일랜드의 식민지 경험, 제1차세계대전의 참상, 근대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막스주의자의 과제는 예술과 이데올로기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보다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또는 이데올로기와 법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명쾌하다.

문학에 대한 조야한 막스주의적 해석은 모든 예술을 예술의 형식을 취한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다. 정반대로, 어떤 막스주의자들은 예술이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어떤 입장에서 예술과 이데올로기의 복잡한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나는 최고의 막스주의 비평은 어떤 방식으로든 두 입장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예술 작품을 한편으로는 예술도 일부인 이데올로기적 구조로서 봐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작품으로서 독자성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막스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을 이데올로기와 연관시키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뒤흔치는 것이다.

시네마 케네디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아일랜드문학 강사

### DVD 신작

〈토지와 자유〉켄 로치 감독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2006년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국 파파 감독 켄 로치의 대표작. 국내에서는 1996년 〈랜드 앤 프리덤〉으로 개봉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발생한 스페인 노동자 혁명의 희망과 좌절을 생생하게 그렸다. 영화는 스페인 파시즘에 반대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영국인 노동자 데이비드 카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보통 역사적 사건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이 사건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토지와 자유〉에서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의 미래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은 정말 뛰어나다. 이 영화를 보고 스페인 혁명이 궁극해진다면, 역시 스페인 혁명을 그린 조지 오웰의 걸작 〈카탈로니아 찬가〉(민음사)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작품은 스페인 혁명 당시 스페인 맑스주의통일노동자당(POUM) 당원으로 참전한 오웰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다.

〈영광의 길〉스탠리 큐브릭 감독



〈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 〈아이즈 와이드 섯〉같은 ‘차가운’ 영화로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데뷔 초기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반전 영화도 만들었다. 이 영화의 각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의 웅맹함’을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사병을 희생시킨 실제 군사 작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영화”라는 일부의 평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전시회

‘동유럽 작가 3인전’



폴란드의 슬라보미르 엘스너와 조안나 웨직, 동독의 마틴 마니 등 동유럽 출신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모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989년에 있었던 동유럽 대중 혁명의 경험, 그 이후 유입된 서방 문화의 충격, 사생활을 통해 본 옛 동유럽 엘리트들의 본질을 그린 회화 작품들이 전시된다.

장소 국제갤러리  
5월 17일까지 전시



## 칼럼/논설

이강택 칼럼

# 김보슬 PD를 생각하며

이강택 KBS PD

유난히 하객들이 많았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기자들, 심지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하지만 체포되기 직전 겨우 골랐다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저간의 모든 일을 잊은 듯 쾌활한 모습이다. 출국금지를 당해 강릉으로 허니문 여행을 떠나야 하고,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앞에서도 마냥 의연하다.

‘광우병’ PD 김보슬. 내가 기억하는 그녀는 대책없이 당돌한 사람이다. 지난해 초 미국 출장을 며칠 앞두고 생면부지의 내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선배님! 준비 많이 못했지만 부끄러워 해낼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 느닷없음에 잠시 당혹해 하던 나는 통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그녀의 진정성과 당찬 용기에 반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것저것 보파리를 풀고 있었다.

###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길 거부한 죄

돌이켜 보면 그녀의 용기와 <PD수첩>의 기풍이 문제였다. 필자가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2006년 10월 이후 한국 방송계에선 누구도 그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려 하지 않았다. 정권은 극도로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계속했고, 미국과 한국의 관료들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온갖 거짓정보들을 양산해 댔다.

조종동 족벌신문들은 미국 육류수출협회의 전면공격을 실어대면서 “광우병은 수년 내로 사라질 것”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강행기준이라 무조건 따라야 한

다”는 그들의 거짓말을 확산하기에 골몰했다. 한국 언론의 취재에 대한 미국 현지 의 블로킹도 한층 강화된 상태. 더구나 막가파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다시 진실을 말하려 했으니... 그때 이후로 그녀와 <PD수첩>에 닥쳐온 역경은 분명 진실에 대한 사명감과 용기가 낳은 업보다.

오역논란 등 소소한 실수가 진정 문제였고 그래서 여론이 호도됐다면, 조종동이 저지른 그 무수한 오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는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던 농림부, 외통부 관료들은 어찌 버젓하게 승진가도를 달리는가? 그들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한 범죄자들임에도.

이명박 정권의 역린을 거스르고 지배권력의 가이드라인을 거부하는 용기를 가진 것,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타락하기를 거부한 것, 적당히 눈감고 권력을 편들어 편하게 살기를 거부한 점을 빼놓고 이 전도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 MBC, 너마저 무릎을 꿇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방송현장의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 이미 사원행동 멤버들을 보복징계하거나 한직으로 격리시킨 KBS에선 지금 엑소더스가 한창이다. 휴직계를 내고 자비로 유학을 떠나거나, 자청해서 일선부서를 떠나 눈물을 머금고 후일을 기약하는 실력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구매력있는 20~30대가 즐겨 보

는 MBC의 광고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 판매부진의 늪을 헤맨다. 조종면 위원장을 구속했다 풀어 준 이후 틈새를 파고들어 YTN노조의 투쟁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도 집요하게 진행 중이다.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미끼로 통신사를 회유하는 공작도 한창이라 들린다.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방송면허를 준다는 예정된 결론을 향해 미디어위원회는 오늘도 파행 중이다.

채찍과 당근을 총동원하는 방송구도 재편 음모. 그 칼날의 끝은 이미 신경민 앵커를 베고 마침내는 김보슬과 이춘근, <PD수첩> 그리고 MBC를 향해 겨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한국 사회의 모든 방송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자본독재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억압을 가리고 가십이나 보여 주는, 권력자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안전이 검증된’ 인사들만 출연해 ‘안전하게’ 토론하는, ‘편안한’ 정보와 판타지들만 돌고 도는, 탁류만이 흐르는, 영악한 바보상자로 복귀할 것이다. 한국 언론에서 이미 사라진 것이 경제공황의 진실이요, 넘쳐나는 것은 낡은 신자유주의의 신기루뿐 아닌가!

다시 돌아온 오월. 지난해 촛불항쟁에 의해 늦춰졌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부활하고 있다. 현 정권의 영구집권을 담보할 과물이 부활하고 있다. 촛불들은 다시 그 과물을 퇴치할 수 있을까? 김보슬 PD의 신혼을, MBC를 구해낼 수 있을까? 대답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과연 최악의 경제 위기 국면은 지났는가? 한동안 주류 언론들이 그렇다고 떠들더니 벼락 오바마도 거들고 나섰다.

오바마는 4월 10일 미국 경제에서 “희망의 불빛을 봤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의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 경제의 자유낙하”가 조만간 멈출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주가가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부활절 직전까지 한 달 동안 23퍼센트가 올랐다.

그러나 이것을 국면 전환으로 여긴다면, 자기기만일 뿐이다. 현 경제 위기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은행의 파산에 뒤따른 주가 폭락으로 금융위기가 심각한 전 세계적 불황으로 확산됐음이 분명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세계 경제 생산이 0.5~1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은 1945년 이후 세계경제가 최초로 수축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을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퍼센트, 일본이 -6.6퍼센트, 유로화 통용 지역이 -4.1퍼센트, 독일이 -5.3퍼센트, 영국이 -3.7퍼센트를 기록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 같은 대형 제조업 수출 국가들은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제조업 상품에 대한 세계 시장

의 수요가 큰 폭으로 줄 것이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국제무역이 연간 8퍼센트 성장해 왔지만, “지금 국제무역 규모가 정신없이 위축”되고 있고, 올해 -13.2퍼센트 감소할 것이다.

### 현 상황은 일본 경제가 1990년대에 겪은 곤경과 비슷

그러나 세계경제가 특정 시점에서 수축을 멈추고 약간 성장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OECD 보고서는 “2010년에 이르면 G7 국가의 실업자 수가 2007년 중반의 갑절인 3천6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경제가 언젠가 바닥을 치게 될 이유 중 하나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단히 심각한 수축 경향에 맞서 공격적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경제의 이륙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로 시작했다. 지금도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파산 상태다. 2000년대 중반에 신용거품으로 창출된 악성 부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애당초 예상 부실 규모를 1조 달러로 잡았지만 지금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로 잡고 있다. 은행 시스템이 이 부실을 떠안고 있는 이상 추가 대출은 제한될 것

이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것이다.

현재 상황은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경제가 1990년대에 겪은 곤경과 비슷할 수 있다. 1980년대 투기 호황 동안 일본 은행과 기업들이 투자한 부실 자본을 처리하는 동안 일본 경제는 10년 이상 정체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담이 은행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전날 발간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는 “[은행]시스템의 부실을 털어버리기 전에 경기 회복은 없을 것”이라는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 - 아마도 IMF 관리일 것이다 - 의 말이 실렸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장 뛰어난 칼럼니스트 중 한 명인 볼프강 문차우도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런던 G20 정상회담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만약 올 가을까지 경제 위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지도자들은 또 다른 도시에서 절망적인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 회담장 밖에는 또 반대 시위대가 진을 칠 것이고, 회담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살린다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담은 허울 좋은 공동선언문이 다시 한 번 발표될 것이다.”

이런 구제적 예언이 사실로 판명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현 경제 위기는 매우 심각하며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논설

#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지난해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민영화, 대운하, 방송장악 등 - 을 반대했다. 이명박의 정책이 “미친” 것은 그가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쌍용차가 2천6백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주식시장에서 쌍용차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우리는 대량 실업이 가져올 비참함과 절망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도처에서 실업과 불평등이 낳는 비극적인 소식 - 자살, 범죄, 질병 등 - 을 비통한 심정으로 접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량 해고가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미국 정부가 1조 달러(1천3백조 원)를 쏟아 부어 은행들의 “악성 부채”를 사들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치솟았다.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들여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의 지난날 과오를 덮여 버리는 것이 오바마 식 경제 붕괴 대처법이다.

한 편도 매니저는 이를 두고 “승리”라고 했다. 그 정책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미국 납세자들만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투자자들이 전리품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학자들과 금융 기관들이 내놓는 새로운 계획은 모두 문자 그대로 도박이다. 정말이지 우리는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

오바마의 이 계획을 논평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설 제목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다. 그런데 이 해결책이 실패하면 이미 위기의 부담을 한껏 떠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까무러치기”는 무엇을 뜻할까?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이 나라 지배계급들도 해결책을 찾느라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다. 이 정부는 금융 기관과 건설사 등을 구제하기 위해 4백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거나 쏟아부를 예정이다. 29조 원이 넘는 수퍼 추경 예산도 편성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조차 이 조처가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에서 노동자 살리기는 뒷전이다.

그런데 왜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퍼붓는 막대한 돈이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는가?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되는 숙련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일에 고용되지 말아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지배계급의 이윤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탕 치기로 부를 쌓는 체제의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한다. 이 체제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이 쌓이는 이윤-빈곤 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는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반자본주의신당(NPA)의 강력한 부상이 그 사례다. 급세기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가장 유력한 사상은 국가 개입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였다. 국제 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하려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아팍; ATTAC)이 이 사상을 대변했다. 국민국가에게 경제적 권력을 돌려줘 2차세계대전 이후의 케인스주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급진 반자본주의 정당인 대중 급진화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당의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여론 조사에서 4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겨레> 같은 온건 개혁주의 언론조차 최근에 시장의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 헝가리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사상을 집중 소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신뢰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는 강력하다. 그러나 체제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있다.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 그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그런 집단적 힘을 언뜻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부산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힘은 다른 작업장에서도, 당장에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을 해고하려는 쌍용차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 쌍용차 투쟁은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 같은 것이다. 체제의 실패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쌍용차 노조 지도부는 이 과제 수행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수천 명이 얼마 안 있어 길거리로 나왔을 판이지 않은가.

올해 메이데이도 저들의 경제 위기 책임 전가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장이 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촛불의 진정한 진화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바로 이 다음날부터 청계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사진 Left21

# “노동자와 함께 범국민항쟁을 시작하자”

이명박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노동자들의 파업,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민주노동당의 2월 노동자대회 등의 압력에 밀려 악법 ‘속도전’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4월부터 억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PSI 전면 참여를 추진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쌍용차, 위니아만도 노동자 대량해고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4월 20일 구성됐다. 조직위는 민주노동당이 중심이지만 5백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위원장은 조직위 결성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절 집회는 “민중 진영뿐 아니라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범국민대회”이고 “이명박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정종남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명박과 재벌·부자들에 맞서 광범한 연대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삼았고 했다.

조직위 결성식에서 발언을 한 ‘6월 항쟁 계승사업회’ 대표이사 이해학 목사, 언론노동 최상재 위원장, 서울대련 박해성 의장 모두 “노동자와 함께 5, 6월 이명박에 맞선 범국민항쟁을 시작”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물론 임성규 민주노동당 위원장이 조직위 결성을 ‘사회연대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임성규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연대전략’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했다.

하지만 노동부장관 이영희를 만난 직후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레디앙) 4월 14일 자”하는 정규직 양보론의 고유 명사로 사용했다.

임성규 위원장이 이처럼 ‘사회적 교섭’과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해 온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기 위해 ‘사회연대전략’을 내세운다면 적절치 않다.

공투본 정종남 공동집행위원장이 주장했듯이 “재벌·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조 원을 환수해 노동자·서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투쟁하기 위한 조직위가 돼야 한다.

## 조직 부문의 결집

2008년 촛불 운동의 경험은 조직된 부문의 지속적인 저항과 자신감있는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줬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초부터 이주노동자 집회, 등록금 집회, 여성의 날 집회, 반전 집회 등 조직된 부문이 저항의 가능성을 축적했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조직노동자들과 함께 2만여 명이 거리행진을 했다. 거리에 있던 시민들은 행진대열에 박수를 쳐주었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촛불 운동이 일어났다.

올해도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촛불정신 계승,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가 이명박 정부에 맞대응하는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조직위는 조직된 부문의 결집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직위 결성식에서도 밝혔듯이 “5월 1일 범국민대회가 단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까지를 함께하는 단위”가 되어 “5,6월 범국민항쟁”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최영준

##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논의 중단하라

지난 4월 16일 오바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 리처드 홀부르크가 한국을 방문했다. 홀부르크는 오바마가 임명한 특사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홀부르크의 주된 임무는 최대한 많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하도록 ‘독려’ 하는(실은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명박은 홀부르크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 지원이 무엇일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전투병 파병, 민간 차원의 지역재건사업(PRT) 확대, 재정 지원 등의 순”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갈수록 구체적 안들이 나오고 있다.

PRT 확대는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전투병 파병은 절대 없을 거라 말하지만 늘 그렇듯이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등장해 “한두 명 사상자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 아프간 파병을 꺼리는 것은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한미 ‘혈맹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미 공조 강화 등을 들먹인다.

재정 지원의 경우 구체적 액수도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은 방미중에 만난 미국측 관계자가 “미국이 한국 측에 매년 1억 달러(약 1천3백억 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군대 파병이 아닌 재정 지원이라 할지라도 결코 지지할 수는 없다. 그 돈이 결국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나라를 회복 불가능한 불구로 만드는 미국의 전쟁에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제국주의 지원을 막기 위한 반전 운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욱 기자 | chotonge@left21.com

## 저항의 길잡이

#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구독료 | 1년 : 30,000원 / 2년 60,000원

구독료 입금 계좌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단, 신청인과 입금인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02-777-27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편리하게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777-2792

## 레프트21의 국내외 칼럼니스트들



정성진 교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우석균 (보건교단연합 정책실장)

박성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이강택 (KBS PD,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등을 연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마이클 데이비스 (《슬럼, 자구를 뒤덮다》(툰베케의 저자, 미국의 도시 이론가·역사학자·정치 활동가)

자이 지일스 웅파론 (타이 출라롱코른대학교 정치학 교수)

존 물리뉴 (《레브란트와 혁명》(해칼레), 《사회주의란 무엇인가?》(해칼레)의 저자,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예술사와 철학 교수)

호썸 엘하밀라위 (이집트 신문 《엘바달》의 기자)

➤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신문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으며

권력자들의 치부를 거침없이 드러내겠습니다.

➤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한 신문입니다

기업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독자들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만 발행됩니다.

➤ 노동자·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신문입니다

가식적 중립을 거부하고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세계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국제 뉴스, 국제 진보진영의 최신 동향을

매호 2면에 걸쳐 심층니다.

➤ 운동 내 토론과 논쟁의 장을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운동 내 다양한 견해를 협력적이고 건설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토론과 논쟁 면을 고정 배치합니다.

➤ 지면 곳곳에 현장의 숨소리와 정서가

스며 있는 신문입니다

현장 활동가들과 독자들의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주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현장의 생동감을 담아냅니다.

➤ 새로운 판형, 전격 도입,

가독성 높은 세련된 디자인의 신문입니다

시원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위해

국내에는 흔히 없는 베를리너 판형을 선보입니다.

※ 레프트21 은 16면 격주간 신문입니다.